

제350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2017년3월1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 1. 제35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 3.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상정된 안건

- o 의원(심기준) 선서 및 인사 1
- 1. 제35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 2.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2
- 3.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2

(14시04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탈당으로 인하여 김종인 의원이 퇴직되었으며, 3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심기준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3월 10일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선애)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14일 이상호·정우택·주승용·주호영 의원 외 274인으로부터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 대표발의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신보라 의원 등 33인으로부터 제출된 청년고용 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심기준) 선서 및 인사
(14시06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1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심기준 의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심기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준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기준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회의원 심기준

○의장 정세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심기준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기준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20대 국회에서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심기준 의원입니다.

지난 수개월 우리 국민들은 뜨거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 주셨으며 정치권에도 헌법가치의 실천을 명령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위중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서문 그대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펼친 국민들의 저력과 2002년 월드컵 때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의 함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정중앙 강원도지만 분단된 한반도의 변방, 최북단 변방의 강원도는 늘 소외받고 설움받아 왔으며 일기예보에서도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고 늘 산간지방, 기타 도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런 강원도를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정가와 지역을 넘어 온 국민의 저력을 모아 가장 성공한 올림픽이 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0개월 늦게 시작한 만큼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심기준 의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제35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0회국회(임시회) 회기를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14일 우상호·정우택·주승용·주호영 의원 외 274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되 오늘은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총 12인의 국무위원을, 내일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총 6인의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14시1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3항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노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탄핵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사저로 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안고 가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입장이 탄핵을 불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복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입장을 탄핵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견해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법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행도 밝혀 준 바가 있는데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 법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께서도 이 탄핵 결과를 승복하는 것인지 불복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법무부의 입장도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

률에 의하여 적절하게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승복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어떤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검찰이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짜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 드리겠다는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검찰에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바르게 결론을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박 전 대통령의 수사상 신분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만약에 소환일 직전에 갑자기 연기한다든가 다시 시간을 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21일로 날짜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서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출석을 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을 했고 또 자료제출 등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 그런데 항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 아프실 것이다 하는 소문이 돌아서 제가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명확하게 출석하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자, 만일 소환을 거부하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수사하실 생각이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명확하게 출석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출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 소환을 거부하면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 그러면 수사해서 구속사유가 충분하면 구속영장 청구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단계에서 아직 본인의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단계에 맞춰서 검찰에서

법대로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지금도 증거 인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왜 안 하는 겁니까? 혹시 시간 벌여 주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검사의 수사 이전에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할 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어도 자료를 일부 제출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검사도 그런 시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 아니, 그러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 대통령기록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옮기면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실 생각이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검찰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어디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 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시점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냐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증거가 인멸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에 오늘이라도 저는 당장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압수수색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수사 중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검찰에서 그것을 떠나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자, 우병우 민정수석 이번에도 봐주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박영수 특검은 우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100% 발부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검찰은 언제쯤 영장 청구할 생각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찰에서 일부러 늦추거나 그런 것 없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 수석이 검찰 식구이기 때문에 감싼다’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많기 때문에 수사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결과를, 못 내면 저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런 일부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검찰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 저는 우병우 사건 이번에 제대로 결론 못 내면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 개혁 대상 1호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뜻을 검찰에 전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차관님, 만일 검찰총장 집 앞에서 검찰총장 얼굴 화형식 하고, 모가지 따겠다고 하고, 야구방망이 들고 협박하고, 온 동네방네 떠돌고 다닌다고 하면 검찰이 지금처럼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야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살해 협박하고, 때려 부수겠다고 현재에 몰려가고, 군대가 빨리 일어나라 하는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내란 선동하고, 이게 적법한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제가 조금 전에도 검찰에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우리 다수의 국민들도 좋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세월호 리본만 달아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잡아갔습니다. 도로를 조금만 걸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잡아갔습니다. 누구는 엄벌하고 누구는 봐주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극우집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특히 폭력을 선동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서 엄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어떤 그런 성향을 떠나서 평화적인 집회는 철저히 보장을 하고 또 불법적·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자부장관 나오십시오.

13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의원**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관 작업의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 짧게는 15년간, 길게는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께서 대통령기록을 지정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본 의원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법을 다 검토해 봤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생산한 기록에 대해서는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기록에 대해서는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일부에서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더욱이 황교안 대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했던 장본인인 황 대행에게 자료를 은폐할 수 있는 지정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행이 관련 기록들을 비공개로 지정해서 이관해 버린다면 원래 기록을 공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대통령기록관이 증

거 자료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71조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할 때, 특히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의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당선인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지정 범위에 있어서도 이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춘석 의원** 그것은 종류를 정하는 것이고 그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일단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열람 또는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자, 그러면 기록물이 폐기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반출하면 처벌받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를 적발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나 폐기 또는 반출 등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기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유출의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저희가 지난 13일에도 청와대에다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 분류 작업 중에 전체적으로 파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에 조사되면 그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이번 특검에서 안중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고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이런 기록들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록물로 지정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자료가 파기되어 버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주요 문서들이, 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들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 버렸다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작년 9월 이후 4개월 동안에 청와대에서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장관, 하필 그 시기에 그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파쇄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파쇄기를 대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문서파쇄기를 지난해 구입한 것은 문서파쇄기가 사용연한, 교체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따라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예산도 이미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제가 보니까……

○이춘석 의원 아니 장관, 청와대 대변인 아니니까 장관의 견해만 말씀하세요. 청와대 것 그대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게 해명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문서파쇄기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정부 때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그런데 그 시점에 구입하는 것은 파기시킬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괜히 신문 갖다가 파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체주기가 11년입니다. 11년의 교체주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 장관! 장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이춘석 의원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한 것을 다시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춘석 의원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을 은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청와대 출입기록이나 서면보고 내용은 국회가, 검찰이, 특검이, 헌재가 요구해도 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기록물 지정하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록들이 공개되거나 이렇게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지정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상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문서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고 이들이 지난 뒤에 퇴거를 했고 또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유출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관 절차에 들어간 것도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관, 그 사이에 자료가 폐기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저에 문서 유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박스가 사저에 대한 통신장비로 간 것으로 해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지금도 유출되거나 파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관 절차를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장관인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 대통령이 궐위돼 가지고 하게 되면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반드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문제가 없도록 저희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청와대 쪽에다가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이춘석 의원 아니, 협조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가장 중요한 것은 무

엇인가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쪽에 주의도 촉구하고 있고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이춘석 의원 농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농사짓는 게 죄입니까? 쌀값 폭락한 것도 억울한데 우선지급금 이미 줬던 것도 다 토해내라고 하면 이것 농민들 두 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선지급금은 앞으로 다가올 가격을 결정해서 미리 주는 것인데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것을 사후에 정산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결국에는 농림부가 데이터를 잘못 적용시켜서 정책이 잘못돼서 높게 이만큼 줘야겠다고 준 것 더 줬다가 지금 잘못되니까 환수 받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려가 있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낮게 책정해서 추가로 지급했을 텐데 이것은 과거에도 실제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좀 높게 많이 주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높게 주면 다시 받아 내야 할 상황이 생기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서 줘야 된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급한 추정 금액이 4만 5000원인데 실제 가격은 4만 4140원이 되니까 860원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 것은 돌려받고, 우리가 만일 정부가 적게 시장가격대로 줬다면 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춘석 의원 지금 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농림부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불만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다 잘못이다 이것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작년에 가격이 사상 유례로 떨어져서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한 18만 8000원에 최종 가격은 17만 9000원이 돼서 약 95% 정도가 커버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우선지급금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성을 높여서 앞으로 많은 금액을 이렇게 돌려받고 되주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지금 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올해 변동직불금 AMS 한도 초과됐다고 75억이나 덜 줬는데 그대 놓고 직불금 덕에 목표가격 95% 보전해 줬다, 우리 대단한 일 했다 언론플레이하고 국회에 와서 자랑하고 그러시는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런 원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변동직불금은 우리 관련 규정상, 법령과 WTO 규정상 지불을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1조 4900억까지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의원 작년에 18만 2000원 줬던 걸 올해 18만 원도 못 줬는데, 지금 자랑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 많이 주고 95%까지 달성했다 이렇게.

장관님 지금까지 취임하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줘야 할 것 안 주고 준 것 뺏고…… 말고 잘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좀 더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쌀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외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또 수입쌀이 많이 쌓이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최대한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도 좀 조절해 나가고 적정한 가격에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장관님, 한중 FTA 때문에 농어민이 피해 보는 것 지원해 주겠다고 여야가 정부와 합의한 법안 먼것번에 국회에 오셔서 우리 법사위에서 그 법 문제 있다라고 잡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관계 부처에서 반대가 있어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연말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춘석 의원 아니, 산자부장관이나 기재부장관이 그 법 문제 있다, 예산상 소요 있다라고 잡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수산부장관이 그 법 잡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의원님 아시다시피 농림부와 타 부처가 일단 정부안으로 나갈 때는 단일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의원 지금 농민들 AI에 구제역에 쌀

값 폭락에 오죽하면 이 나라에서 농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은 자식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저는 WTO 규정 핑계로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한테 떠넘길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쌀값 대책은 지난 2월 9일 날 중장기대책을 발표를 했고 AI와 가축질병 등 관련 대책은 현재 여러 부처가 모여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무리되면 법령 개정 사항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쌀직불금 부분은 농업보조금이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17.9%, 11.9%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전반적으로 농업보조금의 규모와 그다음에 수준·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불금 중심으로 체계를 좀 단순화해 나가자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남 양산갑 출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격동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G2 간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외교·안보도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무기인 사드에 대해서도 중국의 보복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드는 순수한 방어 무기입니다. 결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 번영을 위한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지금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부지 교환 발표 이후에 이러한 것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피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간략히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롯데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롯데마트가 지금 다수 폐쇄된 상태이고 또 그밖에도 관광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약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또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 측이 제약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석 의원 롯데마트 99개 영업장 중에서 지금 55개가 영업정지가 되었고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가 중단된 것이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의원 일부 연구에 의하면 중국 보복에 따라서 한 8조 5000억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피해 예상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사드는 순수한 방어 무기인데 중

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이 무리한 보복조치를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배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때문인데 저희들이 많은 설명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 중국 측이 그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 의원 황교안 권한대행께서—지난해 6월이지요—중국 방문 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러한 부분을, 북한 핵 문제와 또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께서 중국을 방문하셔서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가지신 바가 있고 또 그 계기에 우리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외교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설명해 왔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의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작년 2월 저희가 한미간에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설명을 해 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중국 측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사드에 대해서 일부에서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비준동의 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에 의해서 현재 정전체제나 또 앞으로 향후 유사시에 사드 이상의 엄청난 전략자원들이 전개될 때 다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법제처장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드 관련한 합의가 조약의 형태가 아니고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또 SOFA에 따라서 들여오는 무기체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

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윤영석 의원 사드에 대한 비준동의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윤영석 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실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이나 또 중국, 일본에 편중된 외교가 이번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또 인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안 10개국과 같은 그런 다각적인 어떤 외교채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의원님 지적이 매우 적절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한반도 주변 국가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또 아세안을 넘어서 다른 여타 지역으로도 저희 우방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정후가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은 지휘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김정은은 집권 5년 동안에 28회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지난해까지 핵실험을 세 차례나 감행했습니다. 이북형인 김정남을 백주 대낮에 유엔이 금지한 화학무기인 VX를 통해서 암살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탄두 모형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이미 끝냈다고 할 정도로 핵무기 실전 배치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영석 의원 최근 발사된 북극성 2형은 고체연료로 발사가 됐는데 그러면 사전 감지가 전혀 어렵지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개념화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가 작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화하면 그와 병행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개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이라든지 또 KAMD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공격 및 방어 역량도 병행해서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결국 KAMD 체계로 우리가 고려한 패트리어트 PAC-2, PAC-3 같은 적어도 한 20km 정도에서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고도 150km 전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사드 그리고 SM-3와 같은 이러한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해야지만 지금 실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북한의 그러한 미사일에 대응해서 3축 체계라는 개념으로 공격·방어·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고 특히 KAMD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을 통해서 다층방어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사드에 설치되는 X-밴드 레이더는 감지거리가 한 600~800km 정도, 그런데 중국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중국의 하이룽장성에 탐지거리 5000km, 네이멍구 지역에 3000km 그리고 산둥성이나 허난성에도 지금 그러한 초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해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골프공 하나까지 살살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고성능 레이더를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윤영석 의원** 중국은 레이더로 대한민국 영토를 얼마든지 다 감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고작 800km 레이더 하나 설치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쳐도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답변 올렸습시다라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 또 레이더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또 전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드 레이더 같은 것들은 우리

한반도의 북부지역까지만 국한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서 배치한 미사일이 지금 한 1000여 기에 이른다고 하는 내용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는 중국의 군사역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중국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이런 미사일 배치 사실은 숨긴 채 자신들의 안보 불안만 이렇게 하면서 사드 보복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장성은 성주 사드 배치 후 타격까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 미사일의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과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격의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한국군은 북한을 포함해서 제삼국 어느 나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한다는 개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북한 동포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하에서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정치범을 재판도 없이 수용소에 감금하고, 김정은 집권 5년 동안에만 340명이 공개 총살 처형됐다고 합니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통부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물어본 후에 기권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것이 이 회고록에 나옵니다. 북한인권결의안도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기권을 하고, 북한인권법도 11년간이나 제정을

못 하도록 하고, 이제 야당이 추천해야 하는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재단 출범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금년에 재단 설립·운영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올해 1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영석 의원** 이사 추천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고, 특히 지금 상근이사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영석 의원** 상임이사를 야당 몫으로 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런 합의는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윤영석 의원** 본 의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인권재단을 무력화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려는 이 재단의 출범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년 만에 그래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루속히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 의원**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북한 근로자 한 5만여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북한에 지급되는 임금의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화로?

○**통일부장관 홍용표** 보통 2015년을 예로 들면 1억 20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윤영석 의원** 1억 2000만 불요?

모두 미국 달러화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전액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윤영석 의원** 북한 근로자에게는 북한 화폐로

지급되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 근로자에게는 북한 화폐 또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소위 물표라는 것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연간 1억 2000만 달러의 미국 현금이 북한 근로자에게는 전혀 가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북한 핵 미사일에 쓰였다는 것이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결국 이것은 유엔 제재결의안 2270호와 2321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2270호, 특히 2321호 같은 경우에 북한의 WMD 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금원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 의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개성공단 재가동·확장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에 앞장서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오에서 우리 한국이 스스로 이탈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제 공조를 우리가 스스로 허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북한이 거듭된 핵 개발과 또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의지를 모으고 강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국제사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부터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고 그런 데에 우리의 의지를 모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 의원** 우리 정부를 믿고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작년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후에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요. 특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행정적인, 또 세제 혜택 등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고 기업들은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원칙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각 기업별로 저희들이 계속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 저도 계속 현장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자행하는 보복으로 인해서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중 관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향후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가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역량을 총결집하고 국민 통합에 에너지를 모아서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눈보라 치는 차가운 겨울 광장을 지키면서 성숙한 분노의 표출로 이뤄 낸 광장의 승리이고 직접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현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놓고 친박 호위무사들과 삼성동 사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이 마치 독재정권에 의해서 가택연금당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의 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한 몸 살 궁리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헌직에 있을 때도 참 나쁜 대통령이었고, 탄핵 후 피의자 박근혜의 모습도 참 나쁘습니다.

범죄자의 사설 경호원을 자처하고 있는 친박 호위무사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비부터 반납하셔야 할 것입니다. 폐족을 면

하려고 몸부림칠수록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했던 과거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석고대죄를 하고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통합을 소리 치고 있습니다. 마치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는 나치 전범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진정한 통합과 화해는 사법적 처벌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고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는 범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들인데 안 나왔기 때문에, 행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헌법재판소의……

○**김광수 의원**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광수 의원**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는 존중합니다.

○**김광수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불복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드릴 사안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법무부차관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행자부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 그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 관료들이 욕을 먹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에 대해서 현재는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현재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헌법재판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황교안 불출마 선언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출마 선언과 관련된 아주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교안 직접 출마, 플랜A가 물 건너가면서 황교안의 역할, 역할론 플랜B가 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선수로 떨 의지가 있었던 심판이 친정인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오심을 남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거기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 가지고 ‘현재 국정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서, 고려하여 끝까지 국정의 안정적 관리와 특히 19대 대통령선거의 공명한 그리고 엄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 엄정한 관리를 천명했던 그날이 3월 15일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어제입니다.

○**김광수 의원** 3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요, 역사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마산의거입니다.

○**김광수 의원**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3·15 의거입니다.

○**김광수 의원** 황교안 총리가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한 보수 진영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수 의원**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사상 최초의 탄핵 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입니다. 실제로 대선 때마다 상상도 못 했던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단골메뉴로 총풍, 북풍은 아

주 기본적인었고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던 초원복국집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 국가기관까지 동원되어서 상상하지 못할 부정선거 행위가 21세기 이 대명 천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대선을 이틀 앞둔 밤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과거의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김광수 의원** 피해 가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만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엄정한 관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엄정한 관리를……

황교안 총리가 특정 세력에 기대어서……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한 사람이 엄정한 관리, 엄정한 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국민들은 그렇게 합리적인 의견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번 19대 대선이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또 하나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플랜B, 관리에 대해서 황교안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서 또 일부 폐기하고 무단 반출을 시켜서 박근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수구 기득권 세력에 시간을 벌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피해자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 친위 부대를 통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부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크게, 별로 동의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뭐……

○**김광수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뭐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조선시대 때 있었던 사초의 의미를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공식적 역사 편찬의 자료가 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관이 직무상 작성한 국정 기록입니다. 무단 반출해서 폐기되거나 사저로 무단 반출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황 총리가 기록물 지정을 강행한 다라고 하면 뇌물죄 등 중대한 범죄행위 그리고 세월호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은폐할 것이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강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그거 억측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조항과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와 17조 조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는 지정된 기록물의 경우도 언제든지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열람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삼성동 사저로 옮긴 박스 중에 ‘한아세안 6030 8대(A급)’ 이 박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박스가 뭐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박스에 대해서는 이미 3월 10일 날 청와대 경호실에서 해명했습니다마는, 그 박스 자체에 들어 있는 내용물은 삼성동 사저의 경호를 위한 통신장비라는 것을 이미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게 청와대의 해명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광수 의원**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십니까? 왜 청와대 말만 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 해당 기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수 의원**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이동된 짐 속에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하고 경호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들어가세요.

이창재 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의 이춘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은 청와대만 대변했습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다음 날 10월 25일 그리고 나흘 뒤에 계속해서 파쇄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구입 시점이 마침 대기업들이 K스포츠나 미르재단의 문서 파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의원** 문서 파쇄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그래서 문서파쇄기를 일상적인 구매보다도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구매가 급증했다, 이것이 기록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청와대에서 무단 파기하든지 또는 무단 반출하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검찰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김광수 의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휴대폰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부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다 보도된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하여튼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속속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황 총리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황 총리가 과연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부차관으로서?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법 집행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김광수 의원**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김광수 의원** 삼성동 사저가 무법천지입니다. 폭력, 폭언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행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집회·시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친박단체 집회 신고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집회 신고가 4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군데……

○**김광수 의원** 무법천지를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지금 경찰에서 해당 단체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평화집회는 저희가 보장하되 불법·폭력 집회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학부모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잘 알고 있고요. 어제 학교 쪽하고, 서초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철저한 학생들의 안전조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저희가 추후도 관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들어가세요.

공동책임을 져야 될 국무위원들 누구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성이 없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 현재의 판결에 자신 있게 동의하거나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하는 꼴 먹은 국무위원들, 5·16을 쿠데타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상황이 이 순간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면 국무위원들 모두 탄핵당한 대통령의 공범일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입니다. 남은 기간 국정 공백 없이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재철**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를 출신의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주시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나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입헌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결정을 불복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은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는 데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론 통합의 길을 가야 할 것

입니다.

바른정당은 탄핵 주도 정당으로서 이제 국론 통합과 개헌 주도 정당으로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FTA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한미 FTA 협상 타결을 한 지가 10년 됐지요, 정부 협상 타결? 2007년,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한미 FTA 말씀입니까?

○정운천 의원 한미 FTA. 아니, 국회 비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시작을……

○정운천 의원 그렇지요?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그 조건하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2008년도에 쇠고기 협상이 이루어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랬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때 상황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어서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아마 3선·4선·5선 의원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졸속 협상이다, 피해가 엄청나다, 국민 건강권을 뺏겼다, 그때 제가 담당 장관인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때 우리 장관님이 기획실장님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정운천 의원 무지하게 고생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웃음)

예, 고생했습니다.

○정운천 의원 지금 와서 과연 그것이 졸속 협

상이었고, 과연 그것이 피해를 줬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졸속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 상당 부분 근거가 없는 그런 판단과 우려, 의혹,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하여튼 많은 교훈을 준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운천 의원 그런데 그 뒤에도 촛불 정국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 또 나가요. 이 대의정치의 전당인 국회가 선진화법까지 해 냈는데도 나가는 것은 옳지 않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운천 의원 불편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정운천 의원 이번에 AI가 터졌는데 지금 고생 많이 했는데 AI로 3500만 마리를 살처분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정운천 의원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지금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육환경이 좀 취약한 점도 있고 농가단위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이번 AI는 지금 유럽과 동남아, 중국·미국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육 단계부터 유통 단계 또는 소비 단계에서 많은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철새가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서식하고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천 의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일본은 100만 마리로 35분의 1,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똑같은 유형인데. 그것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메추리도 300만 수가 넘게 죽었습니다. 일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마는 메추리도 300만 수, 그다음에 우리가 오리를 900만 수 이상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리가 한 30만~40만 수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4단계 조치를 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그것을 잘 따르다 보니까 초기에 신속하게 4단계 조치를 못 한 그런 점도 있고 우리의 방역 의식도 일본에 비하면 좀 뒤쳐진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제공격이 좀 늦었고 살처분하는 데 용역업체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어서 제대로 된 살처분, 즉각 처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좀 미숙한 것을 인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런 부분이 미숙해서 이번에 매뉴얼도 고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AI 대책 방안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이 부분은 이따가 국방부장관님께 한번 여쭙 보려니까 국방부장관님 준비하시고, 산자부장관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FTA 협상 지금 5년이 됐지요, 교역이 된 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정운천 의원 거기에 대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월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인사, 의회 인사 포함해 가지고 만나서 한미 FTA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가 상호 호혜적이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게 양국에 다 같이 함께 호혜적인 이익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또 미국과 한국 쪽에서 어느 쪽이, 우리 한국이 좀 더 이익을 본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미국 일부에서 상품교역 적자를 놓고 손해를 봤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상품교역 적자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상품 적자가 20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58억 달러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흑자가 한 141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117억 달러가 되고요.

그 외에도 투자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 한미 FTA 이후에 대비 한국기업의 투자가 세 배 가

까이 늘었습니다. 연평균 2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는 부분, 그래서 이런 서비스 교역 부문까지 같이 봐야 되는 측면, 그다음에 투자가 늘어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성과를 평가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한미 경제 협력관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느냐 이런 쪽에 역점을 뒀야 된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FTA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외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FTA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한미일 FTA도 있는 것이구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1월 달에 한·중미 FTA를 타결한 바 있고요. 이번에 3월 초에 이 한·메르코수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바가 있고, 올해 중에 이스라엘과의 FTA 또 한·인도 FTA 개선 협상 이런 부분들을 타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같이 개방형 통상국가 입장에서는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19세기 우리 세계경제의 큰 틀이 바뀌는 시기에 한국이 대응을 못 해서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산업화에 성공하고 디지털 시대에도 앞서가서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마는 지금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정운천 의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완전경쟁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신산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가지고 각 산업별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게 될지를 논의해 왔고, 특히 전기차 또 첨단소재 이런 부분 등 12개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규제를 풀고 또 다른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R&D 같은 것을 지원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부문의 기업들, 업종이 같이 모여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융합얼라이언스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초기에 시장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이런 노력들을 전개해 왔고요.

특히 올해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련 부처가 모두 함께 모여 가지고 하는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혹시 늦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더 신발끈을 조여 가지고 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천 의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처는 앞으로 두 달 동안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명은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 단계이고 준비 단계이고 또 계속 강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하나 여쭙 볼게요.

지금 탄소산업육성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과가 어디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 철강석유화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이런 거예요. 제가 여쭙 보고 싶은 것은 철강이 중심인데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또 하나 더 여쭙 볼게요. 3D 프린팅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3D 프린팅은 최근에 기계로봇과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정운천 의원 기계로봇과. 그러면 AI 인공지능은 어디에서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런 각각의 산업에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산업에도 체화되어야 되고, 자동차산업에도 체화되어야 되고, 기계산업의 로봇으로도 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모든 과가 AI라든가 IoT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산업 부문을 어떤 식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인지 또는 융복합해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고요.

탄소섬유가 왜 철강석유화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철강석유화학이 기본적으로 소재를 다루는 과입니다. 그리고 탄소섬유는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고요. 철강회사들도 요즘 새로운 소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운천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가 기재부에서 기재

부장관 중심으로 했는데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산자부가 중심이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이…… 막혀요, 신산업이. 그런데 신산업의 특별팀이든 특별사업본부든 만들고 또 그 직제가 꼭 필요하다면, 행안부장관 계시는데 다음 정부에서 그러한 직제를 꼭 만들어 내서 정말 거기가 걸림돌 없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직제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지금도 관련되는 과끼리 융복합해 가지고 TF를 만든다든가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리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피해 보는 우리 관광업계 또 롯데마트 또 한한련 연예인들 이런 문제의 대책은 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콘텐츠 그다음에 일부 소비재, 유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중국 진출 많은 주요 기업들을 만나서 피해 상황 또 피해를 입게 된 조치가 어떤 건지 또 피해의 영향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세 가지 갈래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드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한테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 해 가지고 한 4000억 정도를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사전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잘 지키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모든 통상 채널을 가동해서, 양자·다자 채널을 가동해서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또 차별 받는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 채널을 통해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우리도 조금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 같은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한 26.1% 정도 우리 수출이 갔습니다만 작년에 25%로 저희가 떨어뜨린 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보다 더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하여튼 촘촘히 잘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 국방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총리에게 북핵이 없다면 사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로지 북핵 때문에, 이를테면 중국이 15년 동안 6자회담 주역 국가로서 북한의 북핵을 해결 못 했으니 그래서 방어용으로 사드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 했느냐는 답변을 제가 못 들어 봤거든요. 그것 국방부장관님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권적인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지나치게 사드에 대한 함의를 높게 평가해서 과도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어떤 국가안보 또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서 돌파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아까 윤영석 의원님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그쪽은 5000km의 레이더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 800km 갖고 있는데 당당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다음에 아까 농식품부장관한테 얘기했는데 일본의 아베는 AI가 터지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아니고 조류독감 그게 터지니까 두

시간 만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불과 몇 시간 안에 자위대를 급파해서 초동 대응을 완벽하게 했단 말이에요.

AI가 터지면 군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게릴라가 해남에 나타나면 바로 특전사가 가지요. 이것은 AI는 동물 게릴라입니다. 이 게릴라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요. 그리고 바로 평택까지 뛰어가요. 그래서 이것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AI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부대를 만들어서 지진 또는 홍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온난화 문제로 사회현상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예측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초동 대응 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군이 해결만 한다고 하면 군이 신뢰도 굉장히 받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군이 국가가 겪는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그런 현안 또 여러 가지 재난·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부대를 재난안전 전담부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군 전체가 감축하고 부대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제한이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임무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력의, 사람수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과거에 의무병 병사들을 거기에 투입했을 경우에 그들이 살처분을 통해서 갖는 여러 가지 정신적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 직업군인들로 하여금 그런 임무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제가 군수국장을 모셔 가지고 다 얘기했으니까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요.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재난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국방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보고를 잘 받아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 감사합니다.

기재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역장벽 깨겠다고 고생 많이 해서 당선

되지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래서 작년 예결위에서 ‘지역균형발전예산 제대로 만드는 데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기재부장관께서 지역특별회계 그것으로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400조에서 불과 한 10조, 2% 3%밖에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운천 의원 그것 가지고 생색을 내시더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전체 예산 대비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는 2.5%이고 2017년에는 2.45%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어떤 SOC 사업들이 끝남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정운천 의원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것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가 4년 동안 지원액이 보면 불과 2% 올라가요, 전체 예산은 12.6%. 그리고 지특 예산으로 뭔가 있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2.5%.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한 40조, 10%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특정 규모를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안 편성할 때 지역개발 수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적정 수준의 지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운천 의원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정운천 의원 거기 계신 국무위원님께 권고합니다.

딱 두 달 남았지요? 제가 6개월 만에 그만둘 때 내정자 발표한 이후 한 달 동안, 마지막 퇴임하는 날까지 온몸을 던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통령이 없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을 촘촘히 챙겨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장관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새벽을 울리는 꼬끼오를 한번 울리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서 그냥 갑니다.

○부의장 심재철 정운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과 긴급현안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지금은 춘삼월이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실업대란으로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안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에게 질문할 사항이 많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기재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생계형 가계부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 지난해 150만 가구가 넘어선 한계가구들의 상환불능 위험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한국 경제의 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미국이 금리인상해서 저희가 관계기관이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총량이 13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작년 말에 1340조인데 예년에 비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개선 조치를 해서 은행권은 괜찮은데 비은행권 중심으로 증가 폭이 아주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짓는 것은 일단은 증가율 자체를 한 자릿수로 줄이자,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그 한계가구들이,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지 그래서 시중금리가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 그 한계가구들에게 어떤 서민정책자금을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연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남인순 의원** 지금 정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라고 하는 부분을 매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면 총량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90%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몇 %까지 줄일 계획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글쎄,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퍼센티지를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 증가율, 어차피 이게 경착륙이 되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연착륙이 돼서…… 그러니까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고 한계가구에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또 위험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 한 두 자릿수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율이. 그래서 올해는 한 자릿수 증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총량관리가 정말 필요한데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99.9%에서 79.2%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우리나라도 90%대에서 70%로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표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연체 채무감면 이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자율 상한을 제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자율 상한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리에 있어서의 어떤 상한을 두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특히 한계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환대출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남인순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총량관리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추구를 하고요.

기재부차관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장관님은 안 나오셨나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렇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특히 외교와 안보마저도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대일 외교에서 그 무능을 드러내서 일본의 법적 배상이나 진정한 사과가 없는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과 합의는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국민 여론 조사한 결과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작년 1월 달에 나온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늘어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 1월에는 58%가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지난달에는 70%까지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서 그 합의에 반대하면서 거출금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들도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상황이 이런데 지난달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교부장관께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할머니가 원하시는 것들 또 단체가 원하는 것들을 사실상 다 이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마 그 TV 프로에서 외교부장관이 설명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책임과 사죄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그러한 책임과 사죄 의사를 표명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고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인순 의원** 이날 방송에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의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을 만나서 마치고 돈을 받아야 협상이 시작이 되고 사과도 받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금 수령을 강요하다시피 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 TV 프로그램은 봤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12월 28일 합의 자체에 대해서 또 그 이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적인 부분이 소녀상 관련한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이어서 정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런데 지금 장관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부산시의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조례에 대해서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압력 행사를 한 거지요. 이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녀상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런데 이런 공문을 왜 보내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다만 그 소녀상을 설립하는 위치와 관련해서 소녀상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장소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 그러면 소녀상 자체가 공관의 위엄과 안녕을 해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소녀상 자체가 있다고 해서 공관의 안녕·위엄이 즉각적으로 해쳐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마는……

○**남인순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녀상은, 제가 부산의 소녀상을 가 봤습니다. 소녀상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인하고 이전·철거하라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같이 방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외교부의 행태는 과연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 계속 공문 보내실 겁니까?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보내실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단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저희가 다른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더 이상 이런 공문을,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나 독립성까지 훼손해 가면서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예, 중단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여성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는 건, 앞에서 제가 위안부에 대한 질의도 했지만 결국은 전쟁 상황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여성과 아동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민생이고 또 민생이 안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세상에 전쟁을 남녀 통틀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는 경구를 새기면서 우리의 임무를 굳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 그런 철학에는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회 동의를 필요 없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예, 국회에서 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주에 사드포대 배치는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는 필요하다

고 보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들어도 그 미군기지는, 우리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그런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남인순 의원** 국민적인 합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사드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고 또 중국의 반발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들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드 배치 진행을 일단은 중단하고, 사실 이것이 국익에 유리한 일이나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을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비준에 대해서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동의를 받는 것, 이런 부분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어떤 유형의 동의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벌써 1년 8개월 이상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고 또 정부의 입장 개진도 있었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채택한 그런 정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의원** 그런데요, 국회에서 논의를……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러면 ‘금년 말에 사드 배치 계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5월 말로 앞당겨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의 어느 누구도 5월 말에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관되게 ‘금년 내에 사드 배치가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인순 의원** 금년 내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범위 내에서, 사드 배치를 하는 목적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그것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

회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대응 조치도, 작전 운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면 사드 배치를 연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것이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측에서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요구라기보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도 같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되고 부지 공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 그것을 비롯한 시설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미 측으로서는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무기체계나 장비의 전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12월 20일 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셨지요, 환경영향평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남인순 의원** 그래서 지금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한미 협의를 통해서 공여 면적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지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안 됐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민의 안전 또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법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특별히 법규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인순 의원** 아니, 영향평가 하는 것 좋은데요. 그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사드 발사대 차량 두 대, 일부 장비를 오산기지로 반입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미 측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니까 공여 면적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사드 발사대부터 들어온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왜 서둘러 이것을 갖고 오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탄핵 정국을 사드 정국

으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의심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남인순 의원 그런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탄핵 정국에 사드포대를 전개해서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또 우리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행하는 일을 그러한 정치적인 일과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남인순 의원 환경영향평가도 안 됐는데 먼저 사드포대 일부 장비만, 발사대만 들여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요구하는 사드 배치는 영남권의 성주 한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한 곳입니다.

○남인순 의원 호남권이나 강원권에 대해서 포대 요구는 없었습니까, 분명히?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사드 배치와 운용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어떻게 합의를 하셨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많은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무기체계 구입비용·운용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미 측이 담당하고 우리 한 측은 SOFA 규정에 의해서 부지와 기반시설만을 제공합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은 부지와 기반시설뿐이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 이외에 어떤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책임을 지시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전개와 관련된 비용 문제는 제가 지금 의원님께 답변드린 요지로 여러 국방…… 국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면 사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누가 사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예,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가 남쪽에 전개되면 수도권에 좀 더 조밀하게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남인순 의원 새로 구입은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가 구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신식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개량하는 작업을 하면 정부 재정이 들어가겠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우리 군의 자산이니까 우리 군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 그래서 결국은 사드라고 하는 부분이 수도권 방위에 있어서 어떤 취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고, 거기에 그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다 관련되는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인순 의원 다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말 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정부가 계속 고수할 것이고,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뜬금없는 얘기지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 아니, 그동안 저희가 표명해 온 원칙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예,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미, 북중 간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적극적인 평화 조치도 좀 취해 달라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진정한 봄이 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뇌물죄 등으로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오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 정경유착의 어두운 고리 등을 청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적 현안마다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 또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산업부장관, 한미 FTA가 이제 발효 5주년이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어제로 5주년이 되었습니다.

○**윤상직 의원**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난 한미 FTA 성과는 어떻습니까? 또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미 FTA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미국 일각에서는 상품교역 적자만 보고 협상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품교역 적자만 볼 게 아니라 서비스 부문의 흑자까지 같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역적자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TA 이전과 비교해 가지고 연평균 기준으

로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한미 간에 통상 현안이 있을 때 이걸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교역도 늘고 또 투자도 늘고 또 통상 현안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윤상직 의원** 한마디로 정리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상호 호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양국 경제 모두 원원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또 미국이 한미 FTA가 불평등 협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우리도 조금은 더 이득을 본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전체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를 되돌아보면 아마 그때 장관도 기재부에 근무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서 또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바로 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을 대형 쇠파시와 배척, 일명 빠루입니다. 뜯어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괴담 좀 기억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소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이 창궐될 것이라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윤상직 의원** 화면 띄워 봐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여러 가지 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라는 여기 반대쪽에서 주장했던 그런 괴담들이 사실로 판명된 것 단 하나라도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윤상직 의원** 전부 다 거짓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상직 의원** 시민·재야 단체, 좌파 단체가

주도한 광장의 촛불시위에서 광우병 창궐, 의료비 급등,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등 거짓 선동과 폭력시위가 난무했습니다.

당시 유력 정치인들도 이러한 거짓 주장에 편승하여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화면 한 번 더 띄워 주시지요.

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직전인 2011년 11월 문재인 전 대표는 'FTA가 상호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다 하는 분들이 한미 FTA를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동으로 촛불집회가 100일 동안 지속되는 등 우리 사회가 국론분열로 엄청난 비용을 치렀습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판명됐는데 그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장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반 본전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것, 정말 이것 청산되어야 할 적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앞으로 모든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과 증거에 의해 가지고 진행돼야 된다는 교훈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의원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정치인들은 거짓 선동으로 국익훼손, 국론분열에 앞장섰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한미 FTA 괴담을 퍼뜨린 불순집단들은 얼마 전 촛불집회에서 이석기·한상균 석방과 통진당 해산 반대, 국정원 해체 등을 주장했던 바로 그 좌파세력이라는 것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야당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 이들 세력과 제발 손잡지 말기를 정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저는 또 이 자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 대신 플랜B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대선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선동을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관

이 답변할 건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답변하기에는 걱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상직 의원 가능한 대한민국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엄정하게 대선을 관리하시겠다고 애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저도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가서 충분히 미국 상대방을 만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양국이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미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또 한국 쪽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 왔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예, 한미 FTA가 지금 최고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골드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정말 협상해 보면 별 게 없습니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몇 가지 좀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신약이나 의료나 법률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 의회나 미국 로펌들의 빅마우스들, 이분들의 동향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한미 FTA 큰 틀 아래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윤상직 의원 결국은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걱정이 많습니다.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도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 당국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지금 은행권은 조금 안정적이 됐는데 비은행권하고 집단대출 중심으로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올해는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한 자리 수로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계부채 내용의 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적으로 개선하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금리인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한계차주들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윤상직 의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 나와 주세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이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또 모든 정당들도 분권형 권력구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관,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긴밀한 논의를 통하고 특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윤상직 의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물론 개헌안이 마련되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윤상직 의원** 적폐의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왜 5월 국민투표에 부정적입니까? 이미 대통령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제왕의 탈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적폐 청산을 빌미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인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탄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 국정 역사교과서, 이것은 지금 연구학교로 지정된 게 한 학교밖에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윤상직 의원** 또 보조교재로 쓰려고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하여튼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고 따라서 선택한 방법이 교과서의 선택권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청 및 시민단체가 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이것 불법행위 아닙니까?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보면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 이것 위법사항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택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다시 문제가 또 야기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명백한 위배행위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아니 부총리, 있다면요?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것들이……

○**윤상직 의원** 당연히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시위현장에서 불법적인 그런 일이 자행이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아니, 신문 보도 못 보셨어요? 신문 보도로 난 것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도 당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총리는 뭐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게 법적으로 집회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교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으로 교실을 점거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마는 그러한 법적인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했던 그 주체가 바로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였습니다. 저는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오히려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좌파·독재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고 또 좀 더 세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중국의 행태가 일시적이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상황하에서 단정적인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최근에 들어서, 예컨대 어제 3월 15일이 중국에서 소비자의 날이었고 또 우리 일부 기업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중국 측의 조치가 없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또 제재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경제보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권, 자위권에 대한 내정간섭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중국의 내정간섭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러한 중국 측의 압력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중 관계의 장기적이고 또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의원** 예, 맞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론이 분열되면 중국은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기왕 시작한 사드 배치 다음 정부로 넘기기보다는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정부로서는 차질 없이 이미 수립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상직 의원** 뉴욕타임스에 문재인 전 대표가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또 중국의 억지 주장과 경제보복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차관은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세나 외교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특정인의 언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동맹관계, 또 연합방위태세를 위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많은 국민들이 문 전 대표의 대북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먼저 북한에 가겠다. 개성공단 재가동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을 포함한 전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정부로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 등에 대해서 북한이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게, 먼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엔 제재의 위반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런 문제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와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의원**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뉴스인데요. 이번에 이 가짜뉴스가 참 많은 국론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독일 정부도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가짜뉴스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정경유착, 거짓 선동, 가짜뉴스,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청산해야 될 적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이거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승복을 하지 않고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대통령의 불복을 암시한 메시지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지켜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공작정치와 관제테모를 기획한 청와대와 국정원, 전경련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오직 국

민만 바라보고 정의의 길을 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차관님 단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청와대에 납품한 현황입니다.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의 존재가 처음으로 보도됩니다. 청와대는 다음 날 문서파쇄기 6대를 요청합니다.

11월 3일 최순실이 구속되고 6일 날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됩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바로 다음 날 또 문서파쇄기 6대를 요청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 1월 10일 특검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음 날 문서파쇄기 6대를 또 요청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올해 2월 2일입니다. 그 전날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청와대는 문서파쇄기 6대를 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월 3일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의례적인 구입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문서파쇄기를 구입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3월부터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청와대는 단 1대의 문서파쇄기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차관님? 검사 출신인 제가 볼 때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명백히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수사망이 좁혀 오기 전에 범죄자들이 쓰는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차관님, 범죄 혐의자가 압수수색 전에 문서파쇄기를 다량 구입했다고 하면 검사들은 모두 당연히 ‘증거인멸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재할 겁니다.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듣고서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마는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잘 준비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 이게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구나……

좀 편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요,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청와대의 입장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혜련 의원**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의 원칙, 우리가…… 저도 검사였고 차관님도 검사이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당연히 ‘증거인멸 행위를 했구나’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검찰에서 이 사건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 이번 특수본이 청와대 증거인멸 부분까지도 명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까지 잡혀 있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의원** 제가 조달청에 청와대 납품 현황을 받은 것은 원래는 컴퓨터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와대의 컴퓨터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아까 다른 의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압수수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과정이어서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찰에서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의원** 법무부는 청와대의 법무참모가 아닙니다. 국민의 법무참모가 되어야 하고, 정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법치를 가로막는다면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의원님 말씀대로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 청와대 측에서는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는 집단에게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어야 합니까? 형사소송법상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있는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관님, 법무부가 권력집단의 법무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법무참모로 거듭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을 허용하라고 요청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우선 그것보다 앞서서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기 때문에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판단이 선행된 후에 그다음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의원** 검찰은 이미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압수수색을 막는다면 정부의 잘못된 법 해석을 막을 임무가 법무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백혜련 의원** 차관님, 취지만 알아듣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하여튼 진실……

○**백혜련 의원** 이번에 차관님께서 이런 올바른 지적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로 국민의 법무참모로 법무부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진실을 밝히고 정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신병 처리 방침은 내부적으로 세워졌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출국금지 조치, 기타 계좌추적, 통신조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정확하게 처리되도

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부도 이번 사건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검이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짐작케 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1000여 회가량 통화했다는 것입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3개월 동안의 1000회 통화, 너무 비상식적이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기록이 인계된 후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일부 언론 보도가 좀 부정확하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통화가 많은 건 맞는데 예를 들면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하고 한 4개월여 동안 한 백몇십 회 정도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1000여 회 이런 것은 좀 과장되고 잘못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러면 3개월 동안 1000여 회가 아니라 100회라는 말씀입니까, 문자메시지 포함?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4개월 동안 백몇십 회입니다.

○**백혜련 의원** 백몇십 회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백혜련 의원** 정확합니까, 그것은?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문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 차관님은 이 기간 동안에 우병우 수석과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많지는 않고 한 몇 번 정도는, 한 서너 번 정도 이내에서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일단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작년 국감에서……

틀어 주세요.

작년 국감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관님도 당시에 국감장에 계셨으니 안태근 국장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정

보 보고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감장에서 안태근 국장은 우병우 수석에게 정보 보고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1000회의 통화가 아니라 100회의 통화라고 하더라도 이때 완전히 증언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제가 그날 국회의 다른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는 없었고 나중에 상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검찰국장은 민정수석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사건에 관해서 청와대와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이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혜련 의원** 안태근 국장에 대한 감찰 착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본인 해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는 이번 사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보고한 바는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백몇십 회 소통했다는 것만 갖고서 문제를 삼기는 아직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 분명히 그 기간 외의 통화 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특검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번 새로 구성된 특수본 수사 과정 차관님 보고 받으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중요한 부분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러면 청와대에 정보 보고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러면 법무부 차원에서 종결되는 겁니까, 정보 보고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모든 사건을 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한해서 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부분은 안 하는 것을 저희가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여태까지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

해서 청와대에 보고 안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 사건은, 어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은 청와대에 보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보고 안 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셔도 됩니다.

○**백혜련 의원** 검사 출신인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보다 어려운 것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입니다. 정운회 문건 수사에서부터 세월호 사건 그리고 정보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 등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는 결국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정말 자정의지가 있느냐 의혹을 많이 받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제 살을 도려낸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들의 동료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 그리고 법무부도 그 대상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어떤 성역도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더 이상 막지 말아 주십시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반드시 허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에만 집착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특권과 부패, 정경유착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스

스로 정치를 바꾸어 왔습니다. 위대한 민심을 받아들여 정치권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아픈 역사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민심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나쁜 정책 또한 파면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과연봉제, 파견직 확대, 해고 완화 등과 같은 노동자에 적대적인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외교·안보 면의 잘못된 정책 또한 되돌려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드 배치를 여전히 서둘러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7월 15일 장관께서는 산자위원들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중국 측의 무역 보복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당시 저는—7월 13일입니다—7월 13일 시점으로 현재까지, 그 당시 시점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특이 사항은 가지화된 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중국 상해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을 해서 중국 측과 소통을 했고 모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한중 통상점검TF를 통해 가지고 관계 부처, 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이 불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를 포함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제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현재로서 그때까지는 가시화된 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종훈 의원** 그러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김종훈 의원** 그러면 그동안 저를 비롯한 많은 산자위원들께서도 많은 부분들을 전달했습니다. 우려를 전달하고 어려움이 예측된다,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여긴다,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의원님, 제가 한번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정부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면서 면밀하게 그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을 하겠다고 해 왔어요.

그래서 한중 통상점검TF를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업계랑 소통을 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피해 유형은 뭔지, 피해를 입게 되는 조치의 성격은 뭔지 또 피해의 영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중국 진출 비중이 큰 주요 기업들 대표들과 만나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때도……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영향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제가 점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훈 의원**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드 배치를 하는 순간에 뾰족한 어떤 대응 방법이 많지 않고 보복 조치는 뒤따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

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산자부에서 혹시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영향평가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처 또 업계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피해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관광이라든가 콘텐츠 또 일부 소비재 또 유통 부분을 통째로 가시고 가시화되고 있고요. 아직 제조업 부분까지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훈 의원** 구체적으로 점검은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영향평가서를 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보고서를 낸 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랑 업계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때그때 그 피해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될 때는 바로바로 발표를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전에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국내 산업이 받을 이러저러한 영향에 대해서 논의나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랑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논의는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종훈 의원**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요청이 있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장관이 모르는 요청이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실무적으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중국 측의 사드 보복조치가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그 어떤 대응

도 사실상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걱정을 전달하면 사드 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대답만 저는 여러 차례 이렇게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부처 간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해서 분명히 사드 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복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드 보복조치로 인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016년 기준으로 25.1%로 미국에 비해 2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액정디바이스는 77%, 전자직접회로는 40%, 화장품은 38%, 핸드폰은 14%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는 전체 대외투자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우 대중 여행수지는 2015년 기준으로 69억 달러나 되고 있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46.8%인 807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 측의 사드 보복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먼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해 왔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는 일단 피해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피해 유형별로 해 가지고 어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만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고 또 통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정부에 소통하고 또 따질 것은 따지고, 예컨대 중국에서 관광이라든가 유통 부분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도 표시를 했고 제가 직접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국 상무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김종훈 의원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최근에 대해서도 그걸 하고 또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잠깐만요,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는데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거나 협의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고 물으니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자꾸 있다고 지금 와서 굳이 그렇게 답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협의가 되었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문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사드 배치 후에 저희가 누차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 그다음에 콘텐츠 또 일부 소비재 또 일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향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각종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통상점점TF를 통해 가지고 수시로 관계부처, 업계랑 만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한중 FTA 이행위원회 채널이라든가 또 제가 중국 장관한테, 새로 장관이 부임했습니다. 취임 서한을 보내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실무적으로도 계속 중국 정부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훨씬 더 다녀 보시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고 언론에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면세점은 텅텅 비고요. 지금 면세점에는 어쨌든 순환휴직을 해야 된다고 노동자들에 휴직을 권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손님이 없어 가지고 버스가 텅텅 비어서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까지도 미온적이고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해 보겠다, 국민의 삶은 파탄 나고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의원님, 그렇지 않고요……

○김종훈 의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어제도 제가 면세점 업체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김종훈 의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김종훈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김종훈 의원** 기재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기재부장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 가지고 차관이 직접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해 7월 14일에 나온 기재부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및 대책이라는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제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김종훈 의원**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종훈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3단계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해 사드 배치가 된다면 중국 측의 경제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보고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저희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한,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한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그러니까 그런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글썬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의원** 그런데 그런 어떤 보고서를 만든 시점에서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사드 보복 조치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그 말씀, 부총리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해서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속기록에서 그 말씀을 하

시면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대한 플랜들을 짜고 있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중국 쪽의 사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측을 했다는 제가 말씀을, 제가 토를 다는 이유는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하고요, 대외적으로 발언을 할 때 양국 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발언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는 준비하되 부총리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지만 그와 같이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이런 우리의 어떤 핵심 안보이익을 위한 어떤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똑같이 아까 산업부장관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을 같이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측의 한국관광 중단 등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드 보복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는 중국에서 지금 관찰되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일련의 조치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중히 이것을 주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함께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상황 파악과 그리고 아까 산업부장관도 답변하셨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조치들이 아직 사실관계를 좀 더 저희가 철저히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여기에 피해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 피해 기업한테 한편으로는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 자체가 어떤 법과 국제규범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이나 의원님께서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것은 양국 관계가 있는 것이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사실관계에 좀 더 철저한 규명 없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정부 스탠스는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경제적 문제가 혹시 클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이나 황교안 총리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까도 시나리오도 준비했듯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함께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보고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이 부분은 직접 보고를 드리지는 않고 총리실이나 이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저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김종훈 의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글썄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도 공직자고 정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의 어떤 안보이익을 위해서 한 결정이 어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면 안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국 간의 외교관계나 또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한테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되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훈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사실은 안보와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생각하는 국익은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익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적어도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기본으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니까 국익은 영토주권의 보존 또 그것을 비롯해서 주권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장 큰 국익이라고 보고 안보이익이 국익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훈 의원** 국익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경제적 문제도 포함이 되는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경제적 이익……

○**김종훈 의원** 예.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이익이 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그러면 생각하기에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면의 국익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사드 배치 결정은 국방부 단독으로 하는 일은 아니고 국방부는 주무부서로 합시다라는 사드 배치가 갖는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 전략적 또 우리 국가안보적인 그러한 함의가 있기 때문에 NSC를 포함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7월 초에 이것이 결정이 됐는데 그 전후해서 의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정부 차원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어떠한 손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경제부서도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다만 국방부가 무슨 공문을 관련 부서에 보내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SC 차원에서 많이 논의했습니다.

○**김종훈 의원** 그래서 안보와 관련한 것은 백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어떤 미치는 경제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또 주무부처 산자부와 기재부 등과도 충분히 협

의를 하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이전에 혹시 하셨느냐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면 미흡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장관들 또 국조실, NSC 이렇게 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훈 의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협의를 주로 하셨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질문의 요지, 어떤……

○**김종훈 의원** 협의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당시에는 사드 배치를 할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제한됩니다마는 저희 국방부는 주무부서로서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단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가 산업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 한 장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이는 고려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가 산업부 1개 부처하고만 상의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자부나 또 문체부나,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부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NSC와 국조실 차원에서, 필요한 각 계층에서 이렇게 실무진도 협의가 있었고 또 고위층에서도 협의가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는 것입니다.

○**김종훈 의원** 지금 벌써 상인, 즉 중국 내 사업가 또 중국유학생 등 또 중국수출업자 또 하청업자 이런 모든 곳에서 사드 배치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종훈 의원**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이 문제는 왕도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드라고 하는 그 무기체계가 갖는 의미 이상의 그런 과도한 평가와 그 평

가에 기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또는 이것이 한미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라도 우리 입장을 굳건히 견지하면서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훈 의원** 세계적인 냉전이나 전쟁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치러질까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이 어려워지는 상가 같은 데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고려해서 동반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안보라고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허리끈을 조여 매고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부는 사드 보복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는 사드 배치가 국익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이미 사실과 다른 것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향방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결정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외교부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장관이 나와 있지만 서글프게도 사드 배치에 대해 이들은 아무런 결정권한조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김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 출신 민주당 최인호 의원입니다.

탄핵 이후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여 일 남겨 둔 지금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각종 농단 정책으로 국민들의 국정안정 요구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200만 수산업자·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EEZ 바닷모래 채취 농단,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공항정책 농단, 공공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강행 농단 정책 등 임기 말에는 해서는 안 되는 반민생 정책들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튀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선 전 개헌을 합의하고 전략적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무늬만 대통령직선제로 하여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은 상징적인 권한만 부여하고 국회의 다수가 선출한 총리에게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국회의 개헌특위를 무시하고 단적 함의로 졸속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50일 후 선출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개헌안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개헌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3년 뒤에 끌어내리겠다는 구 새누리당의 계획에 일부 정치권이 야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짜리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국정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3년 후에 내각제를 통해서 친박세력이 포함된 구 새누리당 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나누기 위한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당보다도 국민의당에게 묻습니다.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하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이 진심입니까, 아니면 대선 전 개헌에 친박세력과 함께하자는 원내대표의 주장이 당론입니까? 국민의당이 있어야 할 곳은 과거 새누리당 세력, 친박세력과 전략적 개헌을 논의하는 탁자 위가 아닙니다. 국정개혁을 위한 정권교체의 길에서 저희 당과 선의의 경쟁을 겨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개헌,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는 참된 개헌의 길로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부 1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바다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전개된 남해·서해안의 EEZ 내 바닷모래 채취, 도가 지나쳐서 급기야 43년 만에 우리나라 어획고가 100만t 이하로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이 EEZ 내의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동안 이러한 바닷모래 채취를 해 온 골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골재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2014년부터 낙동강홍수통제소장을 지낸 신 모 씨,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전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을 지낸 심 모 씨가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의원 국토부가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인데 골재 채취를 담당하는 이 이권 단체에 왜 국토부 간부가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글썄요, 골재협회 임원 선임은 저희가 법에 정해진 취업제한 여부 심사 또 그다음에 협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협회 임원이 누구냐하고 바다골재 채취 인허가를 받는 것과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절차를 따라서 인허가를 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골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골재 채취의 연장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인호 의원 자, 그러면 거듭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습니다.

한국골재협회의 요직이 두 사람인데 상근부회장이 한 자리가 있고요, 경영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경영본부장의 자리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과장 출신의 이 모 씨가 최근까지 낙하산 인사로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세요? 국토부가 아니라서 모르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한국골재협회의 오른팔이 경영본부장이고 왼팔이 상근부회장입니다. 한편에서는 오른팔은 국토부 출신, 왼팔은 해수부 출신이 딱 포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글썄요. 의원님, 그 절차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똑같은, 경영본부장도 그렇게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모래 채취 결정이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역영향평가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전문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자, 제가 묻는, 답변에, 대답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국골재협회의 요직 두 자리에 왜 국토부 출신과 해수부 출신이 나란히 그렇게 몇 년 동안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글썄요, 국토부 전직 관료가 간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해양수산부 관료가 가 있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의원 자, 자리로 들어가시고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토부차관님께 질문했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과장 출신, 경영본부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인호 의원 누군지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경일이라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인호 의원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해수부 계셨으니까 같은 동료 직원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분이 아마 골재협회

들어갈 때는 지난 정부 때였는데요, 그분은 농림부에 근무하다가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수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파트너는 수자원공사로서 우리 부하고 직접 파트너 역할을, 협상 창구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해수부 출신이 골재협회 상근부회장이나 경영본부장으로 주요 요직에 앉아 있는 것, 그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 점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최인호 의원 알지 못했다가 아니고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그 정도 판단을 못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사실 골재협회는 저희부 산하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알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해양수산부가 한국골재협회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특히 해양에서의 골재 채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을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관계가 있지요, 어쨌든? 관계가 있는 단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간접적으로 관계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이것이 모래 농단 정책의 출발입니다.

어제 남해·서해 온 해상에서 4만여 척의 어민들이 오후 1시에 일제히 뱃고동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뱃고동 소리가 아니고 어민들이 부르짖는 절규였습니다.

어제 해상시위 보고 다 받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보고받았습니다.

○최인호 의원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특히 옥지도 남방 EEZ 해역에 선망을 비롯해서 많은 중대형 선박들이 와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어업인 관계자들이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많은 의견들과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

왔습니다.

○**최인호 의원** 지난 14년간 1억 3000만 루베 이상의 바닷모래가 채취되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최인호 의원** 바다 주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또 다시 올해 1년간 650만 루베 채취 연장에 또 동의해 줍니까. 더 이상, 바다생태계 이대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의원님, 어업인들 우리 수산인들께서 바닷모래 채취를 완전 중단해야 된다는 데 저희는 해양수산부 수장으로서 많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도 바로 중단을 했으면 좋겠으나 특히 동남권의 경우에 총 골재 수요의 약 60여 % 가까이 바닷모래를 공급하다 보니 지금 당장 중단을 하면 골재를 수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예상되어서 일단은 최소한으로 동의를 하면서 급년 중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이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인호 의원** 영국이나 일본에서 바닷모래가 차지하는 골재 비중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일본의 경우에 팔구십년대에는 약 12%였는데 2000년 이후에는 4%까지 줄었고요 영국의 경우는 기껏해야 1000만㎡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지금 우리는 모래 비중 중에서 바닷모래가 30%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동남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최인호 의원** 동남권은 59%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57%고요.

○**최인호 의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모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인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바다생태계가 더 이상 바닷모래 채취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동의합니다.

○**최인호 의원** 그러면 당장 올 2월 달에 국토부에 동의해 준 그 부분 철회하실 용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의원님, 송구하지만 동남권의 골재 채취는 작년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들고 있고 관련 업계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잘 수용해서 관계부처

와 일단 바다 골재보다도 하천 골재나 육상 골재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장관님, 이번에 국토부에 동의해 주실 때 해저면 깊이 10m 이상 채취 금지 관리 및 이행, 채취선 및 운반선에 옴서버 승선, 육상 입항 시 반입량 확인할 육상 조사원 활용 방안 등 그렇게 조건을 달고 동의해 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의원** 지금 14년 동안 다른 외국에서는 단 4%, 5%, 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0개, 20개의 단서조항을 달아서 바닷모래 채취를 동의해 주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공식 통계만 1억 3000만 루베인데 얼마나 많은 바닷모래를 더 파 갔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이 흘러왔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희가 해양과 해저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사이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의견을 낼 때 여러 조건을 붙여 왔습니다마는 사후관리나 감시 감독이 국토교통부가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점과 우리가 철저히 통제하지 못했던 점을 자인하면서 금년에는 그간에 11개 조건을 붙이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사 채취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을 확고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장관님, 장관님은 한진해운 부도 사태로 엄청난 국부를 유출시킨 그런 책임 있는 장관이고 또 재직 시절에 이렇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바다 골재를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전 공직 생활을 해수부에서 생활해 온 그런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 소신 있는, 더 이상의 바닷모래 채취 연장은 없다 하는 그런 결단과 소신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해운산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진해운의 부도 사태에 대해서 참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의 연장선이었지만 저희들이 해운산업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하루빨리 한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해사 채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이제 정부부처와 그리고 골재의 기본

적인 전체적인 비중을 줄여 나가는 등에 대해서 정말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인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1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부가 김해 신공항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이 넘어가고도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파악을 해 보니까 공항 시설과 접근 교통망 등의 세부적인 비용편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KDI 검증 등의 절차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김해공항이 앞으로 리모델링 수준으로 계획되니까, 신공항 수준으로 계획되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의 입장은 신공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인호 의원** 3800만 명 수용의 신공항으로 한다는 작년의 그 약속 그대로 유효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지금 KDI 검증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의 사업계획서라든지 타 공항 사례, 최근 공항 이용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요 적정 수준의 최종 수요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최인호 의원** 적정 수준이 아니고 정부의 약속, 발표와…… ADPI 용역 결과가 3800만 명입니다. 유지되겠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지금 1차 검증 결과에는 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 수준의 최종 수요를 산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이 부분을 신공항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인호 의원**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해 놓고 공항 이용객을 축소시켜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정말로 대국민 사기극이 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말과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3800만 명 규모의 신공항이 되도록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잘 알겠습니

다.

○**최인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준식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하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앞서 이승만은 망명, 박정희는 암살, 5공화국 이후 7명의 전직 대통령 중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들이 구속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친형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불행한 대통령의 탄생을 보며 저는 제왕적 대통령의 수명이 다했음을 느낍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이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고 새 정부에게마저 제왕적 권한을 쥐어 준다면 작금의 불행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통한 분권형 정치 제도로의 개혁을 명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반발하는 시위, 시민 세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됐는데 부총리께서는 소회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의원** 현행 대통령제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의원 아니, 정부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 부분은 아마 공론화돼서 추진이 되면 정부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사회부총리직은 언제부터 수행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작년 1월 13일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이 재임기간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독대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줌…… 두 사람만 이렇게 만나는 것이 독대라면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독대를 못 했으면 주로 업무는 전화로 논의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가끔 전화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다.

○강효상 의원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주로 대통령이 지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부총리께서 설명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주로 지시사항이 많았습니다.

○강효상 의원 지시사항이 많지요?

수석들과 업무를 논의할 때 어떻습니까, 수석들의 태도는 부총리께 어때요? 공손했습니까, 좀 고압적이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전혀 고압적이지 않았고 주로 교문수석실과의 얘기는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인 조율을 하는 모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효상 의원 수석들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수석들이나 대통령과 전화든 이렇게 상의를 할 때 청와대의 뜻을, 청와대의 어떤 생각을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거부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처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수석들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청와대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강효상 의원 대부분의, 이번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대개 그것이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감사원이나 민정수석을 통한 감시가 두려웠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이나 관료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되면 공직자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이고 만약에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법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 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효상 의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정부가 운영됐다면 이런 파탄이 났겠습니까?

국무회의는 꾸준히 참석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강효상 의원 대통령 권한을 국무위원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의 심의권,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과 부서권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헌법 89조에 여러 가지 국정 기본계획과 일반 정책,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 등에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 기억을 되살리셔서 대통령의 발언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부분의 경우 사전적으로 국무회의 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효상 의원 국무위원은 다른 부처 업무에도 발언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 의견에 별로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부처 간에 조율을 거쳐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부처 간에 안건을 놓고 토론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강효상 의원 그렇게 토론 없이 국무회의가 그냥 통과절차에 그치니까 지금 이런 식의 국정과정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부서를 거부한 국무위원이 기억에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주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의견 개진이 있고 이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처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강효상 의원 교육부장관으로서 주요 간부 인사 하실 때 스스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청와대하고 다 조율을 거쳤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국장 인사까지는 제가 직접 청와대에 전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했고 1급 이상인 경우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교육부장관이 하고, 추천은 보통 3배수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인사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강효상 의원 그렇게 교과서적인 말씀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효상 의원 과연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무회의의 형해화 이것이 지금 현행 대통령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은 역대 모든 정부의 국무회의가 거의 비

슷했습니다. 하향식 이런 의사결정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TV에도 나왔지만 지시사항을 받아 적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부서 거부로서 반대하는 국무위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통법부라는 또 국무회의가 통과절차에 그치는 이런 것이 현행 대통령제의 현주소입니다.

현 제도에서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역에 불과하고 국무회의는 거수기 역할 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 내의 여러 가지 헌법상의 장치들이 그저 장식품으로 전락하면서 측근 비리와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정부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하고 국회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개헌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 헌법개정지원단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각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부처에서 준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고 개헌안 발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 유력 대통령 후보는 이에 대해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누가 권한을 썼나’ 이렇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개헌 발의는 국회나 정부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에 의하면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거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 3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는지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건 헌법에 절차가 다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부총리께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만드는 데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여러 가지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윤병세 외교부장관 못 나오셨으면 임성남 차관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엣그제 한 일간지 조선일보에 ‘이러다 한미 동맹 퍼펙트스톱 맞는다’ 하는 칼럼이 실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어저께 칼럼은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효상 의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리지요.

이 칼럼은 현재 가장 유력 대통령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대세론 못지않게 비토론이 두드러지고 있고 문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상당히 퍼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올 들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후보에 대해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미 관계가 퍼펙트스톱을 맞을 수 있다라는 학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퍼펙트스톱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강효상 의원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와 우리나라 진보 정권이 만나면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기타 ‘미국에도 NO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대담집을 인용한 것입니다마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차관님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 윤상직 의원님께

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특정 인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한미 간의 동맹을 유지하고 또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에 대처하는 게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지난 8일 날 강력한 대통령후보 중 한 분이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고자 한다, 상황을 어렵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주장이 중국에 압박의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관님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 발언은 제가 사실 직접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하여튼 사드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기존의 절차와 합의된 바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강효상 의원 최근 어느 미국 군사 전문가는 미국이 북핵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2년 안에 약 70%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 관계자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미국이 군사행동으로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에 비해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말했구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듯 독수리 연습과 키리졸브 연습을 전후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이 2년 내에 약 70%라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고 미국 정부로서는 그러한 숫자적인 확률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관점에서 미 정부는 어떤 행정부에서든지 모든 선택지를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는 점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문 후보께서 ‘보수정권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 말고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그 발언은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어떤 정부였든지 간에 보수정부를 포함해서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효상 의원** 지난 13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은 긴급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관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다음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원칙과 방침에 따라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효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KBS 방송 뉴스 시청자가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156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조선일보 신문 부수가 얼마지는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도……

○**강효상 의원** 발행 부수가 154만, 판매부수가 126만인데요.

그렇다면 포털 네이버의 하루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효상 의원** 예, 모바일 기준으로 하루에 2600만 명입니다, 2600만 명.

광고시장도 이미 포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6.4%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언론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의 포털은 어떤 뉴스를 선택해 어떻게 배치할지 편집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포털은 언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인터넷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오늘 자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포털의 언론 기능과 책임 강화를 주장하며 포털이 언론의 역할을 계속하려 한다면 언론에 버금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게 싫다면 지금처럼 뉴스를 노출하는 데서 과감히 후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말 그동안 참 무책임하게 포털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을 하든가 아니면 구글처럼 중립적인 검색엔진 역할로 한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강효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포털은 뉴스 배치뿐만 아니라 검색어, 실시간 검색……

○**의장 정세균** 자, 강 의원,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강효상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최근 모 야당 캠프에서 네이버의 부사장인 윤영찬 씨를 영입한 것이 바로 그 실증을 한 겁니다.

포털이나 SNS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 문제도 심각한데요. 최근 독일 정부는 가짜 뉴스나 증오 표현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대해서 최대 609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담당 부처 실

무 차원에서 의 검토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제350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2017. 3. 3.~2017. 4. 1.

일 자	부의안건	비 고
3. 3.(금) ~ 3.15.(수)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 심사
3.16.(목) 14:00	1. 안전심의 2.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3.17.(금) 14:00	1.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계속) ※휴회결의	○3.18.~3.27. (10일간)
3.18.(토) ~ 3.27.(일)	휴 회 (10일간)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 심사
3.28.(화) 14:00	1. 안전심의 ※휴회결의	○3.29.(1일간)
3.29.(수)	휴 회 (1일간)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 심사
3.30.(목) 14:00	1. 안전심의 ※휴회결의	○3.31.~4. 1. (2일간)
3.31.(금) ~ 4. 1.(토)	휴 회 (2일간)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 심사

○출석 의원(269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이용주 이연호 이우현 이원욱 안용수 안동열 오세정 오신환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오영훈 오상호 우원식 유동수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유민봉 유은혜 유의동 윤상직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욱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현승 임이자 장정숙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현재 임이자 장정숙 전현희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임이자 장정숙 정동영 정용기 정인화
 이해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장석춘 장정숙 전재수 정성호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전해철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욱
 장제원 전재수 전희경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동영 정성호
 전혜숙 전희경 정세균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종섭 정태욱
 정성호 정운천 정유섭 정진석 조원진 조승용 조훈현
 정우택 정종섭 정진석 조승래 조원진 조승용 조상욱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조승래 조원진 조승용 조상욱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주광덕 진선미 최교일 최운열
 조응천 조훈현 주광덕 진선미 최교일 최운열 최인호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최교일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채이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연혜 추미애 함진규 홍의락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추미애 함진규 홍의락 황주홍
 최인호 추경호 한정애 함진규 홍의락 표창원 표창원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의락 표창원 표창원
 홍문중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표창원 표창원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개외 시 재석 의원(166인)

강병원 강석진 강훈식 광대훈
 광상도 권미혁 금태섭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원 김세연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중대 김종석 김중회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태년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아
 노웅래 노희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완수
 박완주 박재호 박정주현
 박지원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신동근 신보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안용수 안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상호 우원식 유동수
 유민봉 유은혜 유의동 윤상직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욱
 윤종오 윤한홍 윤호중 이양수
 이만희 이상돈 이석현 이용호
 이완영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우현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장우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종배 이춘석 이학영 이현승
 이철희 인재근 임이자 장정숙
 이훈 임이자 장석춘 장정숙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태욱
 정유섭 정재호 정종섭 정태욱
 조배숙 조원진 조응천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채이배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홍의락 표창원
 홍철호 황주홍 홍의락 표창원

○산회 시 재석 의원(67인)

강효상 경대수 고용진 김광림
 김도읍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원 김승희 김영진
 김영춘 김정우 김중훈 김중로
 김한표 문미옥 문진국 박남춘
 박대출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지원 박찬대 백승주 백혜련
 서영교 심기준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이상호 위성곤 유재중
 윤상직 윤영일 윤종오 윤종필
 윤호중 이동섭 이완영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종명 이학영
 이해찬 이현승 임종성 정갑윤
 정동영 정세균 최도자 최인호
 진선미 최도자 최연혜 표창원
 표창원 함진규 홍의락 표창원

○청가 의원(15인)

김부겸 김정재 김현미 박경미
 박영선 송영길 심상정 오제세
 유성엽 윤상현 정춘숙 조경태

조 정 식	천 정 배	황	희		
○국회사무처					
입	법	차	장	진	정
사	무	차	장	이	인
의	사	국	장	권	영
○출석 국무위원					
부	총	리	겸	이	준
부	장	관		홍	용
통	일	부	장	한	민
국	방	부	장	홍	운
행	정	자	치	김	재
부	장	관		주	형
농	림	축	산	이	기
농	업	통	상	김	영
자	원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출석 정부위원					
기	획	재	정	최	상
부	제	1	차	관	성
외	교	부	제	1	차
관					
법	무	부	차	이	창
관					재
(장	관	직		
무	대	리)		
국	도	교	통	김	경
부	제	1	차	관	환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심기준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17. 3. 14.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김종인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탈당	2017. 3. 8.

○의석 승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심기준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17. 3. 14.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발전특별	배덕광	이양수	자유한국당	2017. 3. 6.
지방재정·분권특별	이양수	배덕광		
정치발전특별	박범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2017. 3. 8.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2017. 3. 14.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탈당	2017. 3. 8.

○의안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2017. 3. 2. 윤종오·박홍근·김경진·추혜선 의원 외 37인 발의)

3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안규백·전혜숙·김해영·강훈식·김영진·최인호·이원욱·안호영·윤후덕·윤관석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안규백·전혜숙·김해영·강훈식·김영진·최인호·이원욱·안호영·윤후덕·윤관석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문미옥·최인호·신경민·박영선·김정우·고용진·인재근·김병관·박정·한정애·우원식 의원 발의)

3월 3일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신동근·안민석·조승래·신창현·홍의락·김영호·이해찬·이용득·박홍근·도종환·전재수·손혜원·이개호·설훈·오영훈·노웅래·김영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희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희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희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

김수민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신상진 · 김도읍 · 이현재 · 김선동 · 김두관 · 박인숙 · 박찬우 · 심재권 · 송희경 · 이학재 · 이종명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문미옥 · 윤관석 · 신경민 · 박정 · 박광온 · 우원식 · 위성곤 · 김정우 · 안호영 · 인재근 · 오세정 · 유은혜 · 최인호 · 김현미 · 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송석준 · 유기준 · 소병훈 · 황주홍 · 이태규 · 임종성 · 최도자 · 이현승 · 추경호 · 엄용수 · 민경욱 · 이은권 · 김선동 의원 발의)

3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함진규 · 이우현 · 박덕흠 · 김기선 · 광대훈 · 정유섭 · 강석진 · 지상욱 · 김석기 · 이철규 · 이채익 의원 발의)

3월 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오제세 · 백혜련 · 조정식 · 유은혜 · 황주홍 · 박홍근 · 박정 · 윤호중 · 김관영 · 양승조 · 인재근 · 김상희 · 위성곤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오제세 · 백혜련 · 조정식 · 유은혜 · 황주홍 · 박홍근 · 박정 · 윤호중 · 김관영 · 양승조 · 인재근 · 김상희 · 위성곤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 유승민 · 유의동 · 김세연 · 이종구 · 여상규 · 홍일표 · 김현아 · 이학재 · 김학용 · 김재경 · 박성중 · 박인숙 · 김영우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김영춘 · 박정 · 박홍근 · 김종대 · 이재정 · 신창현 · 김정우 · 유은혜 · 임종성 · 김철민 · 서영교 · 조정식 · 정인화 · 전재수 · 최인호 · 김해영 · 오제세 · 우원식 · 박재호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임이자 · 장석춘 · 이양수 · 신보라 · 강석호 · 원유철 · 광대훈 · 홍문중 · 문진국 · 지상욱 의원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임이자 · 장석춘 · 이양수 · 신보라 · 강석호 · 원유철 · 광대훈 · 홍문중 · 문진국 · 지상욱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임이자 · 장석춘 · 이양수 · 신보라 · 강석호 · 원유철 · 광대훈 · 홍문중 · 문진국 · 지상욱 의원 발의)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임이자 · 장석춘 · 이양수 · 신보라 · 강석호 · 원유철 · 광대훈 · 홍문중 · 문진국 · 지상욱 의원 발의)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2017. 3. 2. 신보라 · 송희경 · 송석준 · 정태욱 · 김기선 · 김명연 · 박덕흠 · 이양수 · 김승희 · 성일중 · 김종석 · 이종배 · 정진석 · 김성원 · 최연혜 · 김규환 · 이종명 · 김순례 · 민경욱 · 홍철호 · 이현승 · 지상욱 · 이완영 · 권석창 · 김성찬 · 광상도 · 전희경 · 김선동 · 조경태 · 강효상 · 주광덕 · 윤종필 · 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7건 3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안규백 · 전혜숙 · 김해영 · 강훈식 · 김영진 · 최인호 · 이원욱 · 안호영 · 윤후덕 ·

윤관석 의원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김영춘 · 박정 · 박홍근 · 김종대 · 이재정 · 신창현 · 김정우 · 유은혜 · 임종성 · 김철민 · 서영교 · 조정식 · 정인화 · 전재수 · 최인호 · 김해영 · 오제세 · 우원식 · 박재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정동영 · 장정숙 · 박정 · 최경환(국) · 김수민 · 김종희 · 소병훈 · 김중로 · 윤소하 · 이태규 · 윤관석 · 황주홍 · 유성엽 · 조배숙 · 천정배 · 윤영일 · 김병욱 · 심상정 · 박주현 · 이종걸 · 김동철 · 송기석 · 이용주 · 김관영 · 추혜선 · 박선숙 · 박주민 · 김두관 · 민병두 · 권은희 · 박영선 · 정성호 · 이정미 · 김종대 · 박준영 · 김중훈 · 이동섭 · 김경진 · 이원욱 · 신용현 · 김광수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안호영 · 김상희 · 임종성 · 김현권 · 이석현 · 원혜영 · 이용호 · 강훈식 · 김두관 · 최인호 · 김경협 · 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유은혜 · 김영진 · 박정 · 손혜원 · 최인호 · 이용득 · 박홍근 · 김해영 · 우원식 · 김병기 · 노웅래 · 윤후덕 · 김영호 · 전재수 · 오영훈 · 김부겸 · 김두관 · 인재근 · 이훈 · 김정우 · 윤종오 · 기동민 · 정춘숙 · 소병훈 · 김성수 · 강병원 · 이정미 · 김영춘 · 도종환 · 조승래 의원 발의)

3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이은재 · 심재철 · 정진석 · 김순례 · 경대수 · 윤한홍 · 김선동 · 김종석 · 이종배 · 박찬우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추경호 · 강석진 · 광대훈 · 김석기 · 홍문중 · 최교일 · 유기준 · 백승주 · 김상훈 · 이만희 · 박명재 · 엄용수 · 송석준 · 송희경 · 안상수 · 윤상직 · 이현승 · 주광덕 · 김선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이현재 · 김성찬 · 이명수 · 경대수 · 최연혜 · 김명연 · 윤한홍 · 정용기 · 민경욱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

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태욱 · 김도읍 · 성일중 · 박덕흠 · 김용태 · 이은재 · 이명수 · 김성원 · 이우현 · 박명재 의원 발의)

이상 12건 3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한정애 · 신창현 · 박홍근 · 송옥주 · 박정 · 민홍철 · 강병원 · 이학영 · 윤호중 · 우원식 · 이정미 · 원혜영 · 김상희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남인순 · 인재근 · 임종성 · 김철민 · 이해찬 · 윤후덕 · 서영교 · 박남춘 · 박홍근 · 소병훈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박정 · 소병훈 · 김영호 · 윤후덕 · 김정우 · 박재호 · 홍의락 · 오제세 · 박홍근 · 신경민 · 송기현 · 노웅래 · 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신용현 · 김관영 · 김삼화 · 김종희 · 김종로 · 박선숙 · 손금주 · 송기석 · 오세정 · 윤영일 · 장정숙 · 정양석 · 조배숙 · 채이배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송희경 · 성일중 · 신용현 · 박순자 · 김석기 · 유성엽 · 신상진 · 정갑윤 · 강석진 · 조훈현 · 유민봉 · 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설훈 · 윤후덕 · 정재호 · 기동민 ·

이원욱 · 김영진 · 우원식 · 위성곤 · 김병기 · 문미옥 · 김철민 · 소병훈 · 이재정 · 권철승 · 박정 · 송옥주 · 유동수 · 유은혜 · 전해숙 · 송기현 · 김영주 · 심재권 · 이철희 · 김상희 · 노웅래 · 신창현 · 백혜련 · 어기구 · 김경협 · 김한정 · 박경미 · 강병원 의원 발의)

3월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김세연 · 김재경 · 박인숙 · 정병국 · 이종배 · 유승민 · 이진복 · 염동열 · 김병욱 · 오신환 의원 발의)

3월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권은희 · 김경진 · 김동철 · 천정배 · 송기석 · 이찬열 · 김성식 · 장정숙 · 정동영 · 박주선 · 장병완 · 최경환(국) 의원 발의)

3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유민봉 · 김승희 · 윤재옥 · 이태규 · 이명수 · 박성중 · 유재중 · 이종명 · 박찬우 · 정용기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민경욱 · 김현아 · 김명연 · 이만희 · 윤종필 · 윤재옥 · 김정재 · 곽대훈 · 정갑윤 · 박명재 · 정태욱 의원 발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함진규 · 정용기 · 박덕흠 · 박맹우 · 이우현 · 이채익 · 정유섭 · 박완수 · 이명수 · 이완영 의원 발의)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나경원 · 이완영 · 유민봉 · 엄용수 · 전희경 · 김승희 · 金成泰 · 강효상 · 윤종필 · 김정재 의원 발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장제원 · 박순자 · 김현아 · 홍철호 · 이양수 · 박성중 · 하태경 · 김무성 · 강길부 · 이채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장제원 · 정병국 · 하태경 · 정우택 · 김현아 · 홍철호 · 이양수 · 박성중 · 조훈현 · 김세연 의원 발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남인순 · 박홍근 · 박경미 · 운영일 · 김수민 · 김영호 · 장정숙 · 박찬대 · 소병훈 · 정성호 · 김영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박정 · 소병훈 · 김영호 · 윤후덕 · 노웅래 · 김정우 · 박재호 · 홍의락 · 오제세 · 박홍근 · 신경민 · 송기현 · 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추경호 · 강석진 · 곽대훈 · 김석기 · 홍문중 · 최교일 · 유기준 · 백승주 · 김상훈 · 이만희 · 박명재 · 엄용수 · 송석준 · 송희경 · 안상수 · 윤상직 · 이현승 · 주광덕 · 김선동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김영춘 · 이개호 · 박정 · 최인호 · 이학영 · 도종환 · 운영일 · 박홍근 · 윤관석 · 위성곤 · 김정우 · 서영교 · 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정용기 · 송희경 · 권석창 · 강석호 · 함진규 · 원유철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김정재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이훈 · 조정식 · 박정 · 신경민 · 박홍근 · 조배숙 · 김경진 · 위성곤 · 홍익표 · 김병욱 · 우원식 · 김관영 · 신창현 · 권칠승 · 박용진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송기현 · 박재호 · 홍익표 · 박정 · 백혜련 · 인재근 · 조배숙 · 김성수 · 소병훈 · 윤관석 · 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김세연 · 김재경 · 박인숙 · 정병국 · 이종배 · 유승민 · 이진복 · 염동열 · 김병욱 · 오신환 의원 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김상훈 · 곽대훈 · 정태욱 · 홍의락 · 조원진 · 추경호 · 윤재옥 · 강효상 · 이양수 · 박명재 · 주호영 · 안상수 · 유승민 · 김부겸 · 곽상도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3. 3. 정춘숙 · 박홍근 · 박정 · 김병욱 · 오제세 · 조배숙 · 윤소하 · 김상희 · 안규백 · 이정미 · 권미혁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7. 3. 3. 인재근 · 금태섭 · 권미혁 · 기동민 · 김상희 · 강창일 · 김영진 · 오영훈 · 이인영 · 신경민 · 소병훈 · 문미옥 · 김현미 의원 발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인재근 · 금태섭 · 권미혁 · 기동민 · 김상희 · 강창일 · 김영진 · 오영훈 · 이인영 · 신경민 · 소병훈 · 문미옥 · 김현미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함진규 · 이현승 · 정용기 · 박완수 · 정유섭 · 김현아 · 박덕흠 · 김기선 · 염동열 · 이우현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한정애 · 신창현 · 박홍근 · 박정 · 송옥주 · 민홍철 · 강병원 · 이정미 · 이학영 · 윤호중 · 우원식 · 원혜영 · 김상희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이양수 · 송희경 · 강석호 · 곽대훈 · 홍문중 · 지상욱 · 김승희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신용현 · 손금주 · 조배숙 · 김관영 · 오세정 · 김중로 · 김삼화 · 장정숙 · 이용호 ·

김중회 · 박선숙 · 채이배 · 정양석 · 송기석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김태흠 · 강훈식 · 어기구 · 성일중 · 박찬우 · 홍문표 · 이명수 · 정진석 · 박맹우 · 김삼화 · 임이자 · 문진국 · 신보라 의원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김승희 · 임이자 · 김종석 · 전희경 · 장석춘 · 김순례 · 성일중 · 정유섭 · 최연혜 · 문진국 · 유민봉 · 유재중 의원 발의)

3월 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7. 3. 6. 정성호 · 김철민 · 박용진 · 조배숙 · 김병욱 · 김영춘 · 노웅래 · 남인순 · 이찬열 · 최인호 의원 발의)

3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3. 6. 민병두 · 김철민 · 김상희 · 유승희 · 박홍근 · 박정 · 제윤경 · 김수민 · 우원식 · 김성수 · 김정우 · 윤관석 · 송옥주 · 박용진 · 박남춘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6. 정성호 · 김철민 · 박용진 · 조배숙 · 김병욱 · 김영춘 · 이해찬 · 노웅래 · 이찬열 · 최인호 의원 발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7. 3. 6. 함진규 · 김병기 · 김석기 · 염동열 · 정양석 · 윤상직 · 안상수 · 이철규 · 조원진 · 이주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7. 3. 6. 임이자 · 장석춘 · 윤종필 · 성일중 · 강석호 · 곽대훈 · 홍문중 · 문진국 · 지상욱 · 이양수 의원 발의)

3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2017. 3. 6. 김종대 ·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경진 · 김종훈 · 송영길 · 기동민 · 이철희 · 윤후덕 · 김영호 · 설훈 · 김병기 · 정동영 · 윤종오 · 이재정 · 박주현 · 정춘숙 · 소병훈 · 김현권 · 최경환(국) · 심재권 의원 발의)

3월 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3. 6. 강창일 · 박정 · 인재근 · 황주홍 · 조배숙 · 박남춘 · 박홍근 · 정성호 · 이종걸 · 소병훈 · 남인순 · 이해찬 · 노웅래 의원 발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6. 원혜영 · 신창현 · 김정우 · 강창일 · 고용진 · 윤관석 · 이정미 · 민병두 · 박홍근 · 소병훈 의원 발의)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3. 6. 박지원 · 김경진 · 김관영 · 김광수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손금주 · 송기석 · 유성엽 · 윤영일 · 이근현 · 이동섭 · 이용주 · 이용호 · 조배숙 · 주승용 · 황주홍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3. 6. 김해영 · 윤종오 · 윤소하 · 윤호중 · 이찬열 · 전재수 · 박재호 · 김정우 · 서형수 · 최인호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3. 6. 김해영 · 윤종오 · 윤소하 · 이찬열 · 전재수 · 박재호 · 김정우 · 서형수 · 최인호 · 윤호중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 발의)

(2017. 3. 6. 김종훈 · 윤종오 · 어기구 · 심상정 · 김종대 · 노회찬 · 박남춘 · 이용득 · 이정미 · 추혜선 의원 발의)

3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6. 이정미 · 김종대 · 김수민 · 김종훈 · 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김종민 ·

윤후덕·박남춘·심재권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6. 김해영·윤종오·윤소하·윤호중·이찬열·전재수·박재호·김정우·서형수·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7. 3. 6. 윤후덕·노웅래·황주홍·김병욱·김정우·홍철호·박정·이정미·임종성·소병훈·김영춘·심재권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7. 3. 6. 윤후덕·김병욱·박정·윤관석·정성호·김철민·서영교·안규백·노웅래·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김민기·고용진·김병욱·김영춘·김정우·박재호·박정·소병훈·손혜원·신경민·신창현·안민석·유승희·윤후덕·이재정·전재수·제윤경·조승래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이종걸·김관영·민병두·정재호·황주홍·조배숙·오제세·소병훈·전재수·박용진·강창일·민홍철·박남춘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우원식·송옥주·이용득·윤종오·최인호·이학영·인재근·김현권·이원욱·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이종걸·민병두·정재호·조배숙·오제세·소병훈·전재수·박용진·강창일·박남춘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이종걸·민병두·김경진·황주홍·조배숙·오제세·전재수·박용진·송옥주·강창일·민홍철·박남춘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김순례·김종석·홍철호·김석기·

김성원·홍문중·이우현·원유철·강석진·권석창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정병국·이명수·박맹우·조경태·김정재·정양석·정용기·장석춘·장제원·정운천·이종구 의원 발의)

**3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정세균·박홍근·어기구·윤호중·조배숙·정운천·홍영표·장병완·김영진·고용진·이동섭·정인화·박남춘·문미옥·오영훈·이원욱·권칠승·김정훈·김경수·김한정·김영춘 의원 발의)

**3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민경욱·김명연·이만희·윤종필·윤재욱·김정재·강석호·정갑윤·정태욱·박대출·이철우 의원 발의)

**3월 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2017. 3. 7. 김무성·강길부·권성동·김성태·김세연·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학용·박성중·박순자·박인숙·여상규·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군현·이은재·이종구·이진복·이학재·이혜훈·장제원·정병국·정양석·정운천·주호영·하대경·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김현아 의원 발의)

**3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이종명·홍문표·金成泰·송희경·곽대훈·김규환·김용태·김진태·곽상도·김태흠·경대수·윤종필·서청원·김종대·김성찬·김선동·홍철호·박명재 의원 발의)

**3월 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안상수·박찬대·유동수·홍일표·박남춘·민경욱·윤관석·신동근·정유섭·이학재 의원 발의)

**3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이용호·진선미·표창원·장정숙·경대수·박남춘·김광수·김종희·정동영·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3월 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오제세·강창일·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위성곤·이종걸·김영춘·박정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유동수·김영진·이원욱·이철희·김중로·기동민·윤후덕·권미혁·정재호·김현권·박정·이훈·전현희·강병원·강훈식·송기현·제윤경·조승래·김병관·박남춘·박찬대·소병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7. 정부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김정재·오신환·조훈현·곽대훈·김성원·金成泰·이완영·이철우·김도읍·김명연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이학영·김현권·김정우·문미옥·한정애·진선미·도종환·박정·송옥주·최인호·김현미·양승조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이용득·김종훈·조승래·김경협·한정애·강병원·도종환·민병두·김영주·이정미·김현권·박홍근 의원 발의)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신창현·기동민·조승래·권미혁·김철민·강훈식·어기구·문미옥·최인호·박정·송옥주·김경협·우원식·김두관·제윤경·이재정·김병기·김상희·박찬대·이원욱·박재호·설훈·이정미·최운열·이훈·이개호·노웅래·한정애·위성곤·유은혜·정재호·박남춘·강병원·전현희·

심재권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강석진·성일종·윤한홍·함진규·주광덕·추경호·김한표·김선동·박대출·송희경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이용득·김영주·민병두·이정미·김현권·김종훈·조승래·김경협·한정애·강병원·도종환·박홍근 의원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3. 7. 함진규·윤후덕·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정유섭·이헌승·염동열·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남인순·김종훈·김수민·진선미·박홍근·권미혁·장정숙·한정애·김영춘·인재근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이주영·이종명·엄용수·이명수·강효상·조훈현·김정재·윤한홍·송희경·김규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박용진·이종걸·이철희·박찬대·김관영·강병원·제윤경·김해영·최명길·김영주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김성원·곽상도·권석창·김상훈·김정재·박덕흠·박명재·박인숙·유민봉·윤상현·이명수·이우현·정태욱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김성원·곽상도·권석창·김상훈·김정재·박덕흠·박명재·박인숙·유민봉·윤상현·이명수·이우현·정태욱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김성원 ·곽상도 ·권석창 ·김상훈 ·김정재 ·박덕흠 ·박명재 ·박인숙 ·유민봉 ·윤상현 ·이명수 ·이우현 ·정태옥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제윤경 ·오제세 ·박용진 ·민병두 ·윤관석 ·이정미 ·우원식 ·서영교 ·소병훈 ·김상희 의원 발의)

3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8. 정부 제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정갑윤 ·송희경 ·박맹우 ·박대출 ·이철규 ·정성호 ·김도읍 ·이채익 ·원혜영 ·윤영석 ·민경욱 ·조훈현 ·김정훈 ·김석기 ·신보라 ·문진국 ·이종명 ·김명연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장정숙 ·김중로 ·노웅래 ·전혜숙 ·김정우 ·이동섭 ·홍영표 ·박찬대 ·이용호 ·최경환(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김성원 ·김정재 ·이우현 ·이명수 ·정태옥 ·박인숙 ·권석창 ·박덕흠 ·곽상도 ·김도읍 의원 발의)

3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김관영 ·장병완 ·권은희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최경환(국) ·최도자 의원 발의)

3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김성원 ·곽상도 ·권석창 ·김정재 ·박덕흠 ·박명재 ·박인숙 ·유민봉 ·윤상현 ·이명수 ·이우현 ·정태옥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이명수 ·함진규 ·홍문표 ·金成泰 ·

윤한홍 ·유재중 ·이은권 ·정용기 ·김정재 ·지상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장정숙 ·김중로 ·전혜숙 ·김정우 ·이동섭 ·김경진 ·홍영표 ·조배숙 ·이용호 ·천정배 의원 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장정숙 ·최경환(국) ·김중로 ·박찬대 ·천정배 ·손혜원 ·이동섭 ·남인순 ·권은희 ·전혜숙 ·김경진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김관영 ·장병완 ·권은희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최경환(국) ·최도자 의원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유동수 ·박정 ·김영진 ·이원욱 ·이철희 ·김중로 ·기동민 ·윤후덕 ·권미혁 ·정재호 ·김현권 ·이훈 ·전현희 ·강병원 ·강훈식 ·송기현 ·제윤경 ·김병관 ·박남춘 ·박찬대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김관영 ·장병완 ·권은희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7건 3월 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박명재 ·이학재 ·김석기 ·김정재 ·김성원 ·정태옥 ·박덕흠 ·송희경 ·이철우 ·김한표 의원 발의)

3월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김성원 ·곽상도 ·권석창 ·김상훈 ·김정재 ·박덕흠 ·박명재 ·박인숙 ·유민봉 ·윤상현 ·이명수 ·이우현 ·정태옥 의원 발의)

3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 3. 8. 조경태 ·추경호 ·유기준 ·강석호 ·황주홍 ·김용태 ·김현아 ·이현재 ·이명수 ·

金成泰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3. 8. 장정숙 · 김중로 · 노웅래 · 전혜숙 · 김정우 · 손혜원 · 이동섭 · 김경진 · 홍영표 · 박찬대 · 이용호 · 천정배 · 최경환(국)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3. 8. 엄용수 · 정성호 · 박맹우 · 경대수 · 김승희 · 이채익 · 문진국 · 남인순 · 황주홍 · 성일종 · 박명재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 발의)

(2017. 3. 8. 윤영일 · 황주홍 · 신용현 · 주승용 · 金成泰 · 홍철호 · 조배숙 · 김종희 · 이개호 · 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백혜련 · 김영주 · 김경협 · 김영진 · 이원욱 · 강창일 · 김상희 · 이춘석 · 김정우 · 기동민 · 설훈 · 김영호 · 정재호 · 김철민 · 임중성 · 김현권 · 유은혜 · 김병욱 · 김병기 · 강훈식 · 김경진 · 어기구 · 박영선 · 우원식 · 위성곤 · 이개호 · 신창현 · 박찬대 · 안호영 · 소병훈 · 최인호 · 박정 · 송옥주 · 유승희 · 김해영 · 김두관 · 김종대 · 제윤경 · 문미옥 · 윤관석 · 최운열 · 박경미 · 강병원 · 김성수 · 조정식 · 홍영표 의원 발의)

3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김종대 · 박남춘 · 이상돈 · 김종훈 · 윤종오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최운열 · 박용진 · 노웅래 · 박찬대 · 이연주 · 변재일 · 임중성 · 최명길 · 신창현 · 김동철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최운열 · 박용진 · 노웅래 · 박찬대 · 이연주 · 변재일 · 임중성 · 최명길 · 신창현 · 김동철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이학영 · 윤영일 · 박홍근 · 윤호중 · 정춘숙 · 남인순 · 이원욱 · 김상희 · 이춘석 · 고용진 · 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민병두 · 박남춘 · 김철민 · 우원식 · 박용진 · 제윤경 · 김성수 · 박정 · 김수민 · 박홍근 의원 발의)

3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종 · 정대욱 · 최연혜 · 광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박경미 · 강병원 · 강창일 · 김성수 · 김정우 · 김철민 · 민병두 · 박정 · 손혜원 · 안규백 · 어기구 · 전재수 · 조승래 · 최운열 의원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金成泰 · 김승희 · 이은권 · 박순자 · 이종배 · 나경원 · 김정재 · 염동열 · 성일종 · 오세정 · 이우현 · 윤영석 · 임이자 · 주호영 · 최연혜 · 이명수 · 김한표 · 조훈현 · 조경태 · 이완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이만희 · 홍문표 · 박덕흠 · 민경욱 · 이양수 · 홍문종 · 김석기 · 이우현 · 서청원 · 김도읍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조승래 · 도종환 · 노웅래 · 유은혜 · 전재수 · 원혜영 · 안민석 · 박경미 · 오영훈 · 신동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이종명 · 광대훈 · 서청원 · 김성찬 ·

조경태 · 강효상 · 박명재 · 송희경 · 김선동 · 정용기 의원 발의)

3월 1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광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강석호 · 정용기 · 김정재 · 임이자 · 박명재 · 김종석 · 원유철 · 함진규 · 정유섭 · 이완영 · 윤재욱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조승래 · 유은혜 · 전재수 · 원혜영 · 안민석 · 오영훈 · 노웅래 · 신동근 · 설훈 · 박홍근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최운열 · 박용진 · 노웅래 · 박찬대 · 이연주 · 변재일 · 임종성 · 최명길 · 신창현 · 김동철 의원 발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권은희 · 장정숙 · 김경진 · 황주홍 · 유성엽 · 이찬열 · 윤영일 · 김삼화 · 김종희 · 송기석 · 김광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윤재욱 · 박성중 · 광대훈 · 정태욱 · 이만희 · 황영철 · 유재중 · 이철우 · 김정재 · 홍철호 의원 발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이개호 · 황주홍 · 위성곤 · 김현권 · 박홍근 · 민홍철 · 오제세 · 조정식 · 김영춘 · 김정우 · 노웅래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윤재욱 · 박성중 · 유민봉 · 이만희 · 강효상 · 유재중 · 이철우 · 강석호 · 김정재 · 홍철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1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이춘석 · 이학영 · 이재정 · 이인영 · 김상희 · 박홍근 · 정재호 · 금태섭 · 이개호 · 조정식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이만희 · 문진국 · 홍문표 · 민경욱 · 이양수 · 홍문중 · 조훈현 · 김석기 · 이우현 · 서청원 · 이철우 의원 발의)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광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이만희 · 김성원 · 김중희 · 권석창 · 정인화 · 金成泰 · 박인숙 · 김도읍 · 윤재욱 · 박맹우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광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최연혜 · 광대훈 · 金成泰 · 강석진 · 이종명 · 김정재 · 이채익 · 이진복 · 경대수 · 이우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광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광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곽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곽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곽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곽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남인순 · 정춘숙 · 유기준 · 박홍근 ·
서영교 · 박찬대 · 박정 · 윤관석 · 강창일 ·
소병훈 · 박남춘 · 이진복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박인숙 · 황주홍 · 서영교 · 조배숙 ·
송희경 · 유승민 · 이진복 · 남인순 · 김성원 ·
이명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윤종필 · 박덕흠 · 윤상직 · 김태흠 ·
임이자 · 신보라 · 엄용수 · 정우택 · 김선동 ·
민경욱 의원 발의)

이상 9건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임이자 · 金成泰 · 장석춘 · 신보라 ·
윤종필 · 강석호 · 홍문중 · 문진국 · 지상욱 ·
성일중 의원 발의)

3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7. 3. 9. 김도읍 · 성일중 · 정태욱 · 최연혜 ·
곽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함진규 · 이현승 · 박덕흠 · 성일중 ·
강석진 · 김순례 · 김승희 · 김종석 · 정유섭 ·
신보라 의원 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7. 3. 9. 민홍철 · 윤후덕 · 황주홍 · 김관영 ·
김현아 · 김현권 · 임종성 · 이찬열 · 이우현 ·
윤영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인사청문요청안
(2017. 3. 10. 대법원장 제출)

3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채익 · 이현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만희 의원 발의)

3월 13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현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3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0. 유의동 · 김용태 · 정양석 · 홍철호 ·
주호영 · 유승민 · 김재경 · 김학용 · 오신환 ·
원유철 · 김종석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현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현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0. 김영춘 · 최인호 · 김해영 · 전재수 ·
정인화 · 안규백 · 서형수 · 윤관석 · 김철민 ·

김수민 · 박주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이헌승 · 김도읍 · 이우현 · 윤상현 · 이은권 · 유기준 · 정태욱 · 정갑윤 · 박명재 · 이채익 · 윤상직 · 이양수 · 유재중 · 김정훈 · 조정태 · 배덕광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7. 3. 10. 정부 제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헌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경수 · 민홍철 · 김수민 · 박재호 · 홍익표 · 김병관 · 박정 · 우원식 · 전재수 · 김영춘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헌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함진규 · 김병기 · 김석기 · 정유섭 · 염동열 · 정양석 · 윤상직 · 안상수 · 조원진 · 이주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김영주 · 김상희 · 오제세 · 양승조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영춘 · 김해영 · 전재수 · 우원식 · 박정 · 송옥주 · 안규백 · 민병두 · 박남춘 · 서영교 · 노웅래 · 이정미 · 윤관석 · 김철민 ·

박주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김영주 · 김상희 · 오제세 · 양승조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영춘 · 최인호 · 김해영 · 전재수 · 우원식 · 박정 · 송옥주 · 안규백 · 박남춘 · 서형수 · 이정미 · 윤관석 · 김철민 · 박주민 · 오제세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임이자 · 문진국 · 김명연 · 장석춘 · 강석호 · 홍문종 · 지상욱 · 김승희 · 윤종필 · 이양수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헌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헌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헌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헌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7. 3. 13. 정부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3. 13. 윤영석 · 김도읍 · 권석창 · 이채익 · 정우택 · 정갑윤 · 여상규 · 박맹우 · 서청원 ·

정용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3. 조정식 · 박정 · 신창현 · 소병훈 · 서영교 · 이훈 · 민병두 · 임종성 · 윤관석 · 박남춘 · 이찬열 · 홍영표 의원 발의)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3. 윤종오 · 유은혜 · 서영교 · 우원식 · 김종훈 · 김종대 · 김해영 · 박주민 · 김종민 · 박정 · 송옥주 · 김성수 · 김수민 · 민병두 · 유승희 · 김영춘 의원 발의)

3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2017. 3. 13. 윤영석 · 김도읍 · 박완수 · 서청원 · 원유철 · 유기준 · 윤상현 · 이주영 · 이채익 · 조훈현 · 최경환(한) · 홍문중 의원 발의)

3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3. 주승용 · 정동영 · 황주홍 · 이용호 · 최도자 · 박준영 · 윤영일 · 정인화 · 이찬열 · 김관영 · 이용주 의원 발의)

3월 1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3. 홍의락 · 우원식 · 변재일 · 박정 · 이개호 · 심재권 · 박재호 · 정유섭 · 유동수 · 유승희 의원 발의)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3. 13. 전혜숙 · 안규백 · 황주홍 · 이찬열 · 송옥주 · 조정식 · 박남춘 · 정재호 · 김영진 · 홍영표 의원 발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13. 정부 제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3. 김승희 · 안상수 · 이우현 · 박덕흠 · 김종희 · 한정애 · 정우택 · 배덕광 · 이학재 · 오제세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3. 김승희 · 안상수 · 이우현 · 박덕흠 · 김종희 · 광대훈 · 정우택 · 황영철 · 배덕광 · 오제세 · 염동열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3. 최인호 · 김해영 · 문미옥 · 우원식 · 전재수 · 김경수 · 김정우 · 황희 · 박재호 · 서형수 · 이학영 · 임종성 · 권미혁 · 김영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3. 최연혜 · 배덕광 · 박대출 · 강석진 · 이종명 · 김정재 · 이채익 · 김도읍 · 이진복 · 경대수 · 유재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3. 남인순 · 백재현 · 서영교 · 권미혁 · 김철민 · 소병훈 · 윤관석 · 민병두 · 박홍근 · 박정 · 김수민 · 이철희 · 유승희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3. 13. 남인순 · 백재현 · 권미혁 · 김철민 · 소병훈 · 윤관석 · 민병두 · 박홍근 · 박정 · 김수민 · 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4. 김철민 · 김경진 · 소병훈 · 이개호 · 조배숙 · 송옥주 · 김영춘 · 박주민 · 강훈식 · 강병원 · 임종성 · 김현권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박준영 · 주승용 · 정동영 · 황주홍 · 최경환(국) · 권은희 · 최도자 · 김경진 · 김수민 · 조배숙 · 신용현 · 장정숙 · 김관영 · 천정배 · 송석준 · 박선숙 · 이동섭 · 김성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4. 박용진 · 박찬대 · 고용진 · 김경협 · 이철희 · 노용래 · 김정우 · 민병두 · 유승희 · 윤관석 · 김철민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홍문표·김성찬·이명수·이종배·김태흠·이채익·정인화·황희·이만희·김순례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제윤경·오제세·민병두·박용진·윤관석·이정미·우원식·박남춘·소병훈·김상희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전해철·김병관·박홍근·서영교·박정·어기구·김철민·소병훈·박남춘·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5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조정식·박정·신창현·소병훈·이훈·민병두·윤관석·박남춘·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김경수·전재수·최인호·김영호·민병두·박홍근·민홍철·유동수·김철민·유승희·이철희·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신용현·권은희·김삼화·김성식·김중로·박준영·송기석·윤영일·이동섭·장병완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문미옥·최인호·신경민·박영선·홍익표·김정우·인재근·박정·유승희·우원식·추혜선·김현미 의원 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문미옥·최인호·신경민·박영선·홍익표·김정우·인재근·박정·유승희·우원식·추혜선·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총신 위원회에 회부

마라톤 진흥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함진규·박덕흠·박맹우·정용기·박완수·김병기·김기선·이명수·김태흠·

김성찬 의원 발의)

3월 1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권은희·황주홍·장정숙·신용현·이용호·김관영·김광수·김중희·박지원·유성엽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윤후덕·노응래·황주홍·김병욱·김정우·홍철호·박정·이정미·소병훈·서영교·김영춘·심재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김수민·김영춘·박준영·김경수·전혜숙·이동섭·김동철·황주홍·김삼화·유동수 의원 발의)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최도자·이동섭·윤소하·박주민·주승용·서영교·강창일·소병훈·박찬대·김정우·장정숙·권석창·신경민·채이배·박주현·이용주·전혜숙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김삼화·최경환(국)·김중로·김중희·정인화·최도자·이동섭·김관영·송기석·이대규·김수민·김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안호영·김현권·최인호·이석현·정성호·이용호·강훈식·윤관석·이원욱·김상희·임종성·황희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권철승·박재호·박홍근·김병관·정재호·신경민·어기구·황희·백재현·김해영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권철승·박재호·박홍근·김병관·정재호·신경민·어기구·황희·백재현·김해영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7. 3. 14. 권칠승 · 박재호 · 박홍근 · 김병관 · 정재호 · 신경민 · 어기구 · 황희 · 백재현 · 김해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15.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조정식 · 박정 · 신창현 · 소병훈 · 이훈 · 민병두 · 임종성 · 윤관석 · 박남춘 · 이찬열 · 홍영표 의원 발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이철희 · 위성곤 · 강병원 · 박용진 · 어기구 · 강훈식 · 김관영 · 박홍근 · 권미혁 · 조배숙 · 박정 · 김성수 · 김병기 · 이정미 · 김종대 · 안규백 · 박남춘 · 강창일 · 기동민 · 윤관석 · 박주민 · 오제세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이만희 · 김성원 · 김성찬 · 김중희 · 권석창 · 정인화 · 金成泰 · 박인숙 · 김도읍 · 전희경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전현희 · 김철민 · 박홍근 · 유은혜 · 김정우 · 김영춘 · 박남춘 · 윤관석 · 이정미 · 이원욱 의원 발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이철희 · 위성곤 · 강병원 · 박용진 · 어기구 · 강훈식 · 김관영 · 박홍근 · 권미혁 · 조배숙 · 박정 · 김성수 · 김병기 · 이정미 · 김종대 · 안규백 · 박남춘 · 강창일 · 기동민 · 윤관석 · 박주민 · 오제세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이만희 · 홍문표 · 민경욱 · 이양수 · 홍문중 · 조훈현 · 김석기 · 이우현 · 서청원 · 김도읍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김중희 · 김철민 · 이동섭 · 정인화 ·

김관영 · 황주홍 · 이찬열 · 김수민 · 안상수 · 김승희 · 이만희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김해영 · 서형수 · 최인호 · 안규백 · 이용득 · 이동섭 · 윤호중 · 이찬열 · 전재수 · 김병관 · 장정숙 · 김민기 · 서영교 · 권칠승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이만희 · 홍문표 · 박덕흠 · 민경욱 · 이양수 · 홍문중 · 조훈현 · 김석기 · 이우현 · 김도읍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이철희 · 위성곤 · 강병원 · 박용진 · 어기구 · 강훈식 · 김관영 · 박홍근 · 권미혁 · 조배숙 · 박정 · 김성수 · 김병기 · 이정미 · 김종대 · 안규백 · 박남춘 · 강창일 · 기동민 · 윤관석 · 박주민 · 오제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홍의락 · 김상희 · 서영교 · 우원식 · 변재일 · 박정 · 박재호 · 한정애 · 표창원 · 이정미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정우택 · 정갑윤 · 김석기 · 정용기 · 이우현 · 윤영석 · 장석춘 · 김현아 · 이종배 · 김승희 · 김정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정우택 · 金成泰 · 강효상 · 유기준 · 김석기 · 윤종필 · 함진규 · 권석창 · 김선동 · 이종배 의원 발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김명연 · 곽대훈 · 염동렬 · 홍철호 · 김정재 · 임이자 · 정갑윤 · 김성원 · 민경욱 · 홍문중 · 최연혜 · 김순례 · 박덕흠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권칠승 · 김병관 · 이원욱 · 황희 · 박홍근 · 박재호 · 박광온 · 김해영 · 정재호 · 설훈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5. 신보라·함진규·정갑윤·이종배·이철규·박덕흠·김영우·김성찬·이종명·조훈현·임이자·하태경·문진국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신보라·함진규·정갑윤·이종배·이철규·박덕흠·김영우·김성찬·이종명·조훈현·임이자·하태경·문진국 의원 발의)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곽대훈·김도읍·정운천·임이자·김정재·최연혜·함진규·이채익·김명연·김승희 의원 발의)

호형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서영교·박정·박홍근·박재호·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익표·김해영·진선미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민병두·서영교·김경협·우원식·박홍근·박정·김종민·김철민·윤관석·이종걸·김영춘 의원 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권은희·황주홍·장정숙·신용현·이용호·김관영·김광수·김종희·박지원·정동영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하태경·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학용·박성중·박순자·박인숙·오신환·유의동·이종구·이진복·이혜훈·장제원·정병국·홍일표·홍철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김영주·김해영·윤관석·문미옥·강병원·신창현·위성곤·오영훈·우원식·김경수·김영진·조승래·김영호·전해철·이훈·손혜원·김철민·이춘석·박정·박경미·기동민·김한정·황희·최운열·유은혜·강창일·안호영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진선미·전재수·추혜선·박주민·

이정미·이학영·송옥주·도종환·신경민·윤종오·박홍근·권미혁·소병훈·최명길·손혜원·박남춘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진선미·전재수·추혜선·박주민·이정미·이학영·송옥주·도종환·신경민·윤종오·박홍근·권미혁·소병훈·최명길·박남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김영주·김해영·윤관석·문미옥·강병원·신창현·위성곤·오영훈·우원식·김경수·김영진·조승래·김영호·전해철·이훈·손혜원·김철민·이춘석·박정·박경미·기동민·김한정·황희·최운열·유은혜·강창일·안호영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진선미·전재수·추혜선·박주민·이정미·이학영·송옥주·도종환·신경민·윤종오·박홍근·서영교·권미혁·소병훈·최명길·손혜원·박남춘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함진규·이우현·박덕흠·이명수·김기선·강석진·김석기·신보라·임종성·송석준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김관영·김중로·박주현·권은희·윤영일·정동영·김삼화·최도자·박지원·주승용·이동섭·박주선·오세정 의원 발의)
이상 3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제35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 3. 16. 의장 제의)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30일간)

○의안 심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1. 9. 전혜숙·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박광온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5. 노용래·김정우·송기현·장정숙·주승용·박선숙·김영춘·최명길·이용호·장병완 의원 발의)

2017년 3월 1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등록기간 경과 REC 등록에 관한 청원

(2017. 3. 6. 농업회사법인 압구정주식회사 대표 정금희로부터 손금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초고압 송전선로(765kV, 345kV) 경과지 주민 재산 및 건강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청원

(2017. 3. 9. 안병수 외 2,023인으로부터 우원식·권철승·김경수·김관영·김병관·박재호·박정·송기현·어기구·이훈·홍익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17. 3. 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로부터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 질문요구서

(2017. 3. 14. 우상호·정우택·주승용·주호영 의원 외 274인 제출)

○의견서 제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문 송부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 송부

(이상 2건 2017. 3. 7.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남부탐색구조부대 및 제2공항 관련 질문서

(2017. 3. 2. 위성곤 의원 제출)

제주해군기지 관련 질문서

(2017. 3. 10. 위성곤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7. 3. 9. 정부 제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남부탐색구조부대 및 제2공항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7. 3. 13.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통계자료

(2017. 3. 8. 금융위원회 제출)

3월 8일 정부위원회에 송부

2016년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

(2017. 3. 9. 정부 제출)

3월 1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

2016년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7. 3. 9. 금융위원회 제출)

3월 10일 정부위원회에 송부

201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활동결과

(2017. 3. 9.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3월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7. 3. 3. 특별감찰관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록으로 보존함)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7. 3. 8. 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인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통지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17. 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으로부터 비례 대표 국회의원 김종인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심기준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